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000-000214-01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2007. 8.

연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 선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황 정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 숙 이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문 화 관 광 부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문화관광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문화관광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문화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8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 선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황 정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 속 이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국제적 흐름과 국내적 정책 환경의 변화로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정책 관련 많은 현행법들은 그 대상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또한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한계가 있다. 이에 문화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화정책과 관련 법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그 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성평등 문화의 개념과 현실

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개념 및 범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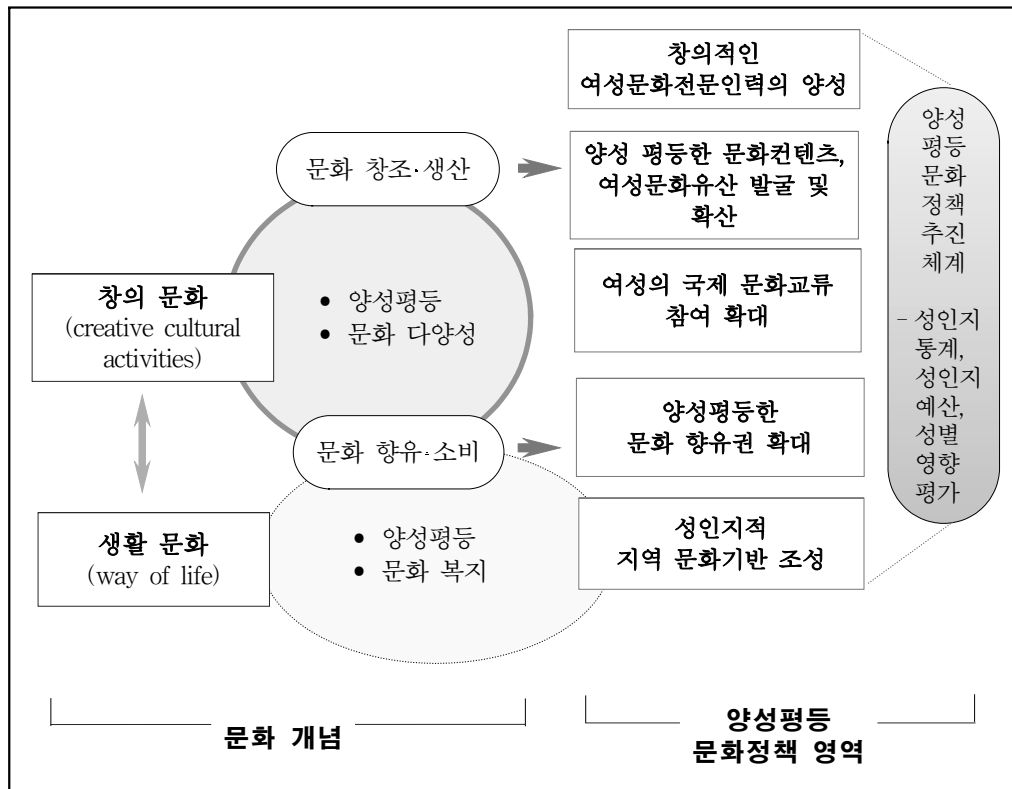
문화의 개념을 단순화하면 광의의 생활문화와 협의의 창의문화로 나누어지는데, 두 영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창의문화의 산물이 다시 생활 속에서 향유·소비되는 순환과정을 통해 문화는 사회조직 및 일상생활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문화정책 또한 문화의 창조 및 생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문화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화 생산에 있어서는 기초예술의 진흥과 창의성 개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향유에 있어서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산과 문화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문화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인프라의 확충도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이다.

양성평등 문화정책은 원론적으로 문화권의 확대 및 문화다양성의 확보라는 헌법적인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지향한다.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정책의 영역들을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조망하여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문화의 창조 및 생산 영역 : 여성 문화인력의 양성(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마련, 직업훈련/재훈련 기회 및 다양한 창작 기회의 제공), 양성 평등한 관점의 대안적 문화콘텐츠 창출 및 확산,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확산, 여성 문화교류 지원 등.
- 문화의 향유 및 소비영역 : 여성 및 소수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접근성 개선, 지역사회 공공문화시설의 성별 수요 파악, 성인지적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확산
- 정책기반 및 추진체계 : 성인지 통계의 생산(문화인력 통계 및 문화 향유에 관한 통계 등),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양성평등 문화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역량 강화 등

양성평등 문화 및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념도



나. 여성의 문화 활동 실태와 문제점

(1) 여성의 문화향유 실태

문화 향유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관람비율의 양적 비교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러나 향유의 질적인 측면이나 향유의 장애요인 측면에서는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성들은 소극적인 문화 소비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문화향유자가 되어 스스로의 문화역량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남성보다 다소 불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화예술 전반에 관심은 많으나 집중적인 관람 경험이 다소 적은 편이며 경제적 장애로 인한 제약을 남성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적극적인 문화향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비 지출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의 문화 창조·생산 활동 참여 실태

여성 잠재인력은 많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경력을 지속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입직 - 직업 훈련 - 승진 등이 일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취업자의 경우도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고 특정한 자격증에 의한 관리나 인력 DB의 구축 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3)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공공문화정책도 그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정책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성 중립적 (gender-neutral)’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문화정책의 특성 상 성별을 고려한, 즉 성인지적인 (gender-sensitive)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도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재화이자 서비스의 형태를 갖게 되며,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에 국민들이 쉽게, 보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성평등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문제는 첫째, 문화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의 영역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한 가지 기준을 모든 영역에 통일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만족이나 결핍은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불균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의 문화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여성문화유산, 여성들의 생활문화 등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확산하는 정책, 새로운 시각의 여성창작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정책 등이 그 예이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이나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수록 문화생활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문화 향유에서는 성별 불균형보다는 문화향유자로서의 여성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잠재적 욕구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획일화된 상업적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기초 예술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수요층으로써 여성들이 가진 잠재력은 향후 기초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지역사회의 생활주체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참가자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 내린 문화정책의 확산, 문화향유의 생활화를 지향한다면,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 집단이다.

기초 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성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문화예술 잠재인력은 많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전히 적다. 여성 문화예술인 및 문화산업 종사자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인력활용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

가 있다. 여성인력의 진출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적 가치나 여성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또는 하위문화 subculture)를 표현하는 새로운 콘텐츠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3.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도입과 확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시작점은 1983년에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될 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1995년에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이념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문화전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에 중앙정부의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여성발전의 종합계획인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문화 TF를 운영하여, 문화관광정책에의 성 관점 반영을 위한 내부적 기반을 점검한 바 있다.

나. 외국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사례 검토

외국의 주요 국가들의 문화정책 속에 보이는 여성관련 문화정책 방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국별 여성문화 정책의 원칙과 영역

국 가	여성문화정책의 원칙	세부 중점 영역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소수 민족, 이민자와 더불어 더 나은 보편적 조건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문화적 소수자’(Cultural Minorities)로 취급 ○ 문화분야 양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 policy) 으로 예술과 미디어에서의 양성평등 ○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과정 개혁(성주류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미디어, 광고 등의 여성 고용상태 - 상위직 여성의 고용상태 - 여성예술가의 사회적 상황 -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소득수준 - 결정권자의 위치의 여성비율 증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과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활동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총체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기구(Status of Women Canada : SWC)를 통한 여성과 문화 관련 활동 지원 ○ 캐나다의 문화발전과 문화유산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를 고양 ○ 캐나다 정체성에 대해 여성들의 진보적인 기여 인정 ○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2000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여성발굴 -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여성지원 - 예술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육성 -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지위 개선 - 공연예술영역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장애 및 고용 장벽 제거 - 문화적 정체성의 표명 및 문화적 차이를 보존 가능하도록 원주민 여성들 지원 - 모든 민간 방송국은 캐나다 방송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성 역할 묘사 규칙”을 고수해야 함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이 분포되어 있음 ○ 북경 여성회의 이후 핀란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성주류화(mainstreaming)라는 입장을 공식화 함 ○ 1995년 성평등법(Equality Act of 1995)을 제정한 데 이어, 1997년에는 평등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 함께 하는 삶(working life) - 의사결정 메커니즘 -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평의회(the arts councils)나 지역위원회(municipal board)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고수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문화관련 정부법안에서 문화정책은 “언어, 무대, 이미지, 소리 그리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 더 나아가 이는 성인교육, 조직활동의 영역 내의 수단, 일상적인 삶과 문화유산 보존” 이라고 정의 ○ 구조와 규범의 투명성을 가정하는 양성평등을 향한 스웨덴 정부의 주요한 출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업예술과 예술가 정책 -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참여자로서의 시민 - 2000년 이후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문화영역에 여성책임자 수의 증가 - 예술지원위원회(The Arts Grants Committee)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지원금지금을 분석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활동영역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에 초점 ○ 적극적 우대조치(positive action) 자극 ○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 1990년대에 이 논쟁은 여성에서부터 소수민족(여성과 남성을 포함)의 문제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코틀랜드 정부는 ‘평등전략(Equality Strategy)’이라는 이슈를 모든 스코틀랜드 정책입안의 핵심으로 삼음 - 여성과 문화에 관련하여 문화매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는 ‘공포가 없는 삶’(Living Without Fear)이라는 보고서 발간 - 여성, 폭력, 포르노에서의 DCMS의 역할을 언급

다.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문화관광부는 2006년에 확립한 ‘창조’, ‘소통’, ‘나눔’ 등의 문화행정의 3대 가치를 2007년에 정책과제로 구체화 하여 ‘창조적 콘텐츠로 미래를 풍요롭게’, ‘신 한류로 한국문화 확산을 지속가능하게’, ‘문화 나눔으로 대한민국을 신명나게’라는 3대 역점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고 2007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제시하고 그에 따라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전략 목표들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그 동안의 성 분석은 주로 여성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권익을 높이려는 정책으로만 여겨졌지만 이것은 향후 양성 모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성인지적 고려는 모든 정책분야로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에서 문화 부문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정책의 방향이나 비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별 특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성인지적 이해가 수반되어 수행된 문화정책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증대시키지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여성가족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책 수립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듯 문화관광부의 2007년 주요사업도 효과적인 시행과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쟁점과 연계시킨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관광부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제안하면 다음 표와 같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디지털화·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창작 환경 강화 및 투자·유통환경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통융합환경에 대응, 콘텐츠 정책 추진 역량 제고 ○콘텐츠 창작소재의 다변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콘텐츠산업 투자 여건 대폭 강화 ○디지털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소재의 문화콘텐츠 개발 ⇒ 성인지적 영상사업지원 ⇒ 남녀평등의식에 근거한 콘텐츠 공모전 ⇒ 유아용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 지원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배포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문화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인력들의 성비를 분석하여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 ⇒ 여성의 재취업 기회 증대에 적극 활용,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등 여성적 삶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 형태 적극 활용
우리문화의 보존과 활용, 전략적 세계화 추진	민족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및 문화정체성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현대적 창작 지원 ○민족문화 자료의 현대적 활용 및 민족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문화에 대한 성별 분석적 데이터 구축 ⇒ 민족문화성별영향분석, 계승자 성별비율
	한류의 지속·확산, 세계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지역을 아시아권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지역별 전략 차별화 ○[한스타일]의 세계화 추진 ○문화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강화 및 저작권 보호 조사 	⇒ 한류의 향유자 성별선호도
	해외 문화활동 지원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문화환경을 감안, 재외문화원 특화사업 지중(50%) ○코리아센터 설립 확대 및 기능 강화 	⇒ 활동의 주체자, 참여자, 관람자, 성별분석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집중 개최 및 잠재시장 개척 ○UN 본부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강화 	⇒ 국제 여성문화단체 교류지원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국민 문화향유 확대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사회서비스의 증진 및 체계적 전달 ○ 생활권내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관광시설에 성인지적 서비스(이용방식, 시간, 종류 등등)에 대한 지원 ⇒ 성별선호도 설문조사 및 원인분석 ⇒ 강좌 참여자 성비를 고려한 교육 전문가 배치 ⇒ 문화공간 이용자의 성별분석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의 본격 추진 ○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특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여성노인, 여성인구에 대한 이해와 특성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소외계층의 성별구분에 따른 문화활동빈도와 경향, 문화활동의 차이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 예술과 문화유산을 특화한 지정거점 문화도시 조성 ○ 지역문화산업의 창조·연구·보급 역량 강화 	⇒ 지역문화의 전문예술문화인력과 문화향유자의 성별분석
	인간과 문화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간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 ○ 국가 이미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 정책 강화 	⇒ 여성을 문화 생활공간의 중심으로 고려
기초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예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예술관련 법제 개선 ○ 열린 예술정책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의 강화 	⇒ 여성을 예술진흥의 중심자로 확대 고려
	예술 진흥 재원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력시스템 구축 ○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 	⇒ 문화예술 소비자에 대한 성별 분석
	예술 창작·유통의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장르별 전략적 지원정책의 강화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활용 시스템 정비 ○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 성별에 따른 선호 장르분석 ⇒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성별분석

라. 양성평등 문화정책 예산의 현황

문화관광부에서 양성평등문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이 2005년도에는 1.7억 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약 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부의 의지가 예산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전체 문화관광부의 예산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양성평등문화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아마추어로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인구층은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숫자적으로는 많다. 하지만 실제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거나, 문화의 주체로 창조 활동을 하는 인구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문화의 수혜자는 여성이 더 높다는 편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21세기 문화복지사회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균형 있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화 창조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이다.

현재의 여성들은 단순한 향수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성문화 활동은 여성들의 참여와 교육 수준향상 등으로 증진된 권리의식과 가치향상욕구를 가지고 있고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적 경험과 욕구를 표출하고자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예술계 구조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잠재적인 문화 예술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 창조 활동의 비율과, 실질적인 임금, 노동의 질 등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이와 같은 여성의 문화 예술 활동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문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가부장제로 인한 사회적 불균등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성인지적 문화정책과 이를 수반하는 사업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인지적 차원에서의 예산과 사업들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적극적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 이런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이 문화를 단순한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여성들을 예술의 주체자로 파악하고 그것이 평등문화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문화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성인지적 사업을 수행할 예산은 여성예술가 창조자 혹은 생산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여성예술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문화예술의 창조와 생산 측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여성의 문화 예술활동 현황 파악은 여성의 문화 예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문화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가. 객관적 자료, 중장기 전망에 입각한 양성평등 문화정책 확립

여성의 문화 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초자료와 성별 분리통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고 그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기초통계자료를 수집할 때 이에 대한 성별 분석 보고서도 동시에 생산하여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산업 관련 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하거나 여성들의 차별적 수요를 분석하는 심도 있는 연구 성과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대규모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한 성별분석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 및 정책 수요를 밀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문화예술 및 산업 분야별로 체계적·순차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성별분리통계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지역 여성문화의 진흥 - 문화향유 정책의 중점 대상으로서의 여성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문화 관람률에서 성별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다만 여성들의 관람 경향에서 남성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성들의 문화 향유가 대중문화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여성들은 미술·공연예술·고전음악·무용·문학 등 기초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또한 남성에 비해 다양한 장르를 관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문화향유 수준은 남녀가 유사하지만 앞으로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성이 더 높으며, 이는 현재의 여성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잠재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향유 지원정책은 그 효과성 및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양적으로 더 풍부한 문화향유에 대한 여성들의 잠재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령이나 생애주기,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문화 향유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가족친화적 문화 프로그램, 소수자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여성은 각 지역에 설치된 문화예술 시설의 주요 이용자이므로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체계적인 진단과 점검을 정례화해야 하며, 여성이용자의 의견을 환류(feedback)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주부, 어머니’로만 보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각종 문화시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이고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주체인 여성들을 문화시설 운용의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업화된 문화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전시나 공연을 지역 문화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여성 문화생산자와 향유자가 만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 교육, 전시 및 관람, 생산자들의 작업 공간, 문화 동아리 활동 등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운영도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다. 체계적인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는 문화 분야 잠재인력은 여성 비중이 매우 높다. 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여성 잠재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유망한 잠재인력의 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여성 유망분야, 혹은 여성의 진출이 희소한 유망 분야에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인맥 형성 등에서 불리한 여성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하여 경력을 축적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여성 창작자 지원, 대안적 양성평등 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품이나 문화상품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컨텐츠 공모전과 선정작에 대한 제작 지원, 여성들이 양질의 대안적 문화컨텐츠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 관련 기금 운영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문화예술인의 실태 파악, 경력 축적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산업 노동시장에서는 직업별 직능별 성별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저임금의 소모적 노동력으로 일하다가 조기에 퇴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여성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직업 훈련 및 재훈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라. 문화예술 정책의 시민사회 기반확대 및 파트너십 강화

문화부문의 노동시장은 대규모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이 극히 소수이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취약한 비정규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통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 장르, 산업 분야나 직업별로 자발적인 여성 문화예술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이들이 정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적인 민-관 관계의 구축은 여성 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파급효과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마.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에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가 되리가 본다. 현재 문화정책국의 문화정책과에 담당사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정도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성인지적 문화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여성정책담당관은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은 문화관광정책의 성별 영향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 성 인지적 문화관광 통계 및 지표 개발 지원,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지원, 문화관광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지원, 문화관광부 주관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 관점 통합방안에 노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과 전문행정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쿼터제의 수용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문화정책 전담 담당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는 여성문화정책의 계획수립, 평가, 예산편성, 정책수행, 사후평가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양성평등문화 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5. **현행 양성평등문화관련 법령 현황 및 한계 검토**

가. **문화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1)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헌법은 문화국가원리를 선언하고 있다(헌법 전문, 제9조, 제69조). 문화국가란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문화형성의 과제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문화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문화영역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문화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문화가 경제에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문화적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전통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국제화·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국가원리가 20세기와는 달리 문화적 기본권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의 개념을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가꾸고 돌보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문화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사회국가의 원리를 충족시키고 보충해주며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개념 정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문화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의 창조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인재양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 문화가 생활문화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 발전과 국제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근대입헌주의 시대의 부국강병이 제국주의적·절대 왕정적·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 결과물이었다면 21세기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국가의 위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의 목적규정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문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문화적 기본권은 소극적으로는 사회의 한 영역인 문화와 관련된 권리라는 영역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기본권은 영역을 초월하여 자유권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권이자 환경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다.

(2) 문화관련 국제기준

우리에게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문화적 권리는 UN이 1948년 12월 10일 제정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이미 사용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개념이다. 문화기본권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2005년에는 문화다양성협약(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을 선언하였다. 이는 문화향유권과 문화표현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문화권이 생존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를 창조할 권리, 문화 활동에 참가할 권리 등)의 세계적 동향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는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수자의 문화향유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남성적 감수성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성의 감수성 표현 및 양성이 평등한 문화표현에 대한 요구와 여성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한 키워드로 양성평등한 문화표현과 문화향유권 확대가 부각되고 있다.

(3) 현행 문화관련 법령 현황

문화에 관계되는 법제는 크게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법제, 문화산업 및 문화미디어 관련 법제, 관광산업 관련 법제, 체육 관련 법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주요한 목적은 첫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창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는데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며, 셋째,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기능 보장 및 언론과 국민간의 건강한 상호관계 형성을 만드는 데 있다. 결국 이러한 법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문화 창조력의 증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성인지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문화관련 법령 중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이 되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법령은 문화예술교육의 양성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최근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2007. 5. 22. 개정)에서 문화정책국 내의 문화정책팀장의 분장 사무에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제6조제3항 13의2호)이 추가된 정도에 불과하다.

그 동안의 문화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은 한 번도 정책의 고려사항이 된 적이 없었다. 성 주류화가 최근에 부각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문화정책이 성별 이슈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문화는 성 중립적이라는 오래된 시각과 시장 원칙을 문화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사이에 문화가 양성불평등을 반영하고 나아가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화 영역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남성적 시각과 정체성이 문화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정책에 있어 성 분석적 이슈인 시장의 인력 구조, 문화정체성, 문화교육, 문화복지가 한국의 문화영역에서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다. 먼저 인력의 문제에서 문화 전반에 걸쳐 남성인력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히 남성의 숫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뿐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직종과 직급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문화정체성에서는 우리 문화전통을 이루는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남성 혹은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리큘럼과 인력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법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성을 가장한 성 중립적 규정이 양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시책이나 계획을 강구하고, 정책이나 사업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과 하부조직을 통한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정책과정과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현재도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성 중립적인 문화예술 관련법령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현행 문화정책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그 밖에 특정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나, 이상의 법률들은 그 대상 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과 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동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28조에서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킬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의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만으로는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양성평등

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다.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헌법 상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무 부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지원시책,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문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성계획,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비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문화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6.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가. 법률의 목적 및 방향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 생산, 참여와 향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마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 법률의 대상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문화유산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문화유산 분야에 공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기본법 및 진흥법, 각 개별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토대상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여기에서는 기본법과 진흥법을 대상으로 법 제·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입법 방식

입법방식은 크게 독립입법을 제정하는 방식과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실체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서 제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률제정의 용이성과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관련 법률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이념과 시책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입법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각각의 문화영역에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이라는 단일법 제정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차별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영역에서의 여성의 특성 및 장점을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포함한 문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과 문화기본법 제정 시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문화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기본이념과 목적에 양성평등 이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문화예술기본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인 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 규정과 함께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장을 설치하여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원시책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성평등문화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문화산업, 문화예술과 각 분야의 문화관련 법 역시 성인지적 시각에 입각하여 대폭적인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문화 관련법이나 「문화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률 상호간의 충돌방지는 물론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화 관련 기존 법의 개정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개정(또는 추가 할)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양성평등 이념 반영 ○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항 개정(성 인지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추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항 개정(위원회 구성시 일정비율 여성 할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이념 반영 ○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추가) ○ 문화산업통계 조사 시 성별분리통계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수행시 양성평등 관점 고려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 조항 개정(성인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추가)
지역문화원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 사업에 지역 내 양성평등문화진흥 사업 추가
문화기본법 (제정될 경우를 대비, 개정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의 양성평등 이념 삽입(“성별, 지역, 계층, 세대간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 문화발전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추가 ○ 문화영향평가 시 성별 고려 ○ 국가문화진흥위원회의 적극적 조치 규정 추가(일정 비율 성별 고려) ○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 및 기반조성에 관한 장 신설(여성문화관련 기관 단체 육성, 문화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 여성문화유산지원 등)

또한 독립 입법 방식을 택하였을 경우 법의 체계와 주요 골자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의 지정)
제3장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조성	제6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제7조(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 제10조(여성문화유산지원 등) 제11조(성별문화영향평가)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설치)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문화예술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제16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용도)
제6장	부칙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5년 마다 양성평등 문화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기본계획의 심의기구로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를 두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 ③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④ 여성창작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 문화복합공간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⑦ 문화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⑧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라.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의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와 영향력을 예측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설득력을 높인다. 예상되는 효과로는 첫째,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성인지적 문화정책은 특정한 성에 대한 혜택이 아니며 모든 이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다는 사회적 당위성을 드러내고 정책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정책 입안자 및 수행자들로 하여금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예산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다섯째, 정책결정자의 일회성 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장기적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양성평등문화의 개념과 현실	11
1. 개념 정의	13
2. 여성의 문화활동 실태와 문제점	19
제3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45
1.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도입과 확대	47
2.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57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73
1. 여성문화정책 기반 조성: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아젠다 수립	75
2. 제도와 조직 개선	76
3. 교육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79
4. 평가관리	80
5. 통계체계 구축	84
6. 여성문화인력 양성과 지원	85
7.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	88
제5장 현행 양성평등문화 관련 법령 현황 및 한계	91
1. 문화관련 법령 체계 및 내용	93
2.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117

제6장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121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123
2. 법률 제·개정 목적 및 입법 방식	127
3.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 방안	138
 <부록> 현행 법률 개정(안)	147
참고문헌	155

표 차 례

<표 1-1>	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4
<표 2-1>	지난 1년간 장르별 예술행사 관람 경험	21
<표 2-2>	예술행사 관람 횟수	22
<표 2-3>	예술행사 관람(참석)에서 가장 큰 어려움	22
<표 2-4>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 - 7개 대도시	22
<표 2-5>	문화시설 방문경험	24
<표 2-6>	계열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25
<표 2-7>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직업별	26
<표 2-8>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취업상태	27
<표 2-9>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활동관련 수입	27
<표 2-10>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가 개인의 수입	28
<표 2-11>	2년제·4년제 대학의 문화산업 관련학과 여학생 비율(2005)	29
<표 2-12>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	30
<표 2-13>	영화산업 직무별·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31
<표 2-14>	애니메이션산업 직무별·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32
<표 2-15>	게임산업 직무별·성별 경력 년수와 임금격차	33
<표 2-16>	방송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년수 및 급여 비교	35
<표 3-1>	성인지 여성정책 추이 변화와 여성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개요	48
<표 3-2>	여성문화T/F의 추진배경	51
<표 3-3>	해외의 성인지 정책 담당기구	53
<표 3-4>	각 국별 여성문화 정책의 원칙과 영역	56
<표 3-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	58
<표 3-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	59

<표 3-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I	61
<표 3-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V	62
<표 3-9>	문화 및 문화정책 환경 개선 및 문화 소외자를 위한 정책	64
<표 3-10>	문화관광부 2007년 성인지 예산현황	65
<표 3-11>	2005년~2007년 문화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예산 변화 추이	66
<표 4-1>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연구 아젠다(2007~2020)	75
<표 4-2>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사업 아젠다(2007~2020)	76
<표 4-3>	외국의 공공부문 할당제 실시현황	78
<표 4-4>	정책단계별 평가지표	81

그림차례

<그림 2-1> 창조·소통·나눔과 문화정책의 방향	15
<그림 2-2>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정책의 영역	17
<그림 2-3> 양성평등 문화 및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념도	19
<그림 2-4> 여성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애경험	28
<그림 2-5> 방송 분야별 종사자 성비(2005)	34
<그림 2-6> 기존 문화산업 인력 조사의 성별 35세 미만 연령의 분포	37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문화정책에서 양성평등 관점(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은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창의한국」(2004)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으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도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와 관련된 정책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창의한국」의 '양성평등 문화 확립' 세부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조성 ○ 양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조성 ○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 확대 ○ 여성문화 창조 지원 ○ 여성문화유산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 거점 조성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여성문화 관련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실태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 여성 참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또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국제적 흐름이며 국내적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유네스코와 유럽연합(EU)은 문화정책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목표의 하나로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도 여성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적극적인 문화향수의 주체이자 문화산업의 중요한 소비자이며, 또한 문화예술 관련 정규 교육과정 재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생산자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정책이 일상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4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며 특히 여성들은 정책의 중요한 수요자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인재 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확대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자 미래의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문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성계획, 장기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비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고, 여성문화예술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일회성 행사 지원이 대부분이며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전담 부서나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객관적 정책 자료의 구축 및 축적,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구할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표 1-1> 타 부처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¹⁾

부처	전담 조직 및 인력	주요 정책 내용	여성관련 법률 (주요 기구)
교육 인적 자원부	여성교육 정책과 (과장 및 과원 6명)	- 양성평등교육 - 여성의 사회교육·직업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 교육기관의 남녀차별(성희롱) 방지 -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 시행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등)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시행령)
과학 기술부	인력기획 조정과 (여성과학기술 인력지원팀) (팀원 2명)	-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시책의 수립 - 여성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기술분야 성인지 통계 및 각종 지원사업	-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 ('02.12.18제정) -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NIS-WIST) 운영
농림부	여성정책과 (과원 6명)	- 여성농업인 및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01.12 제정) - 여성농업인 센터 설치 (2006년 전국 50개소 운영)

1) 중앙부처 중에서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방부의 여성정책과(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정책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표에서 제외하였다.

부처	전담 조직 및 인력	주요 정책 내용	여성관련 법률 (주요 기구)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여성고용팀 (팀원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차별개선업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고용평등 평가센터 운영, 남녀차별 개선 및 실태조사, - 고용상 분쟁 자율해결에 관한 사항 (고용평등상담실, 명예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등) - 기획업무: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제5장 및 고용보험법 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법령 검토, - 남녀 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조정,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출산여성 계속고용장려금·재취업 지원금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제도 개선, 육아휴직 및 급여·장려금제도 운영·개선 - 양립지원업무 : 여성가장지원사업 운영(직업훈련, 창업지원, 장려금 지급 등),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 평가 및 성별분리통계 구축, 여성친화적 고용모델 개발 및 여성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 능력개발업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대책 수립,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개선(급여 포함), 직장 보육지원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 재정 및 평가업무: 고용평등 관련 법인설립 인가 및 지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평등상담실, 고용평등 평가센터 운영) - 근로기준법 제 5장(고용차별, 모성보호) - 고용보험법(육아휴직 급여)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 (과장 및 과원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소관 법령·제도의 개선 - 여성 관련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 -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 - 법무부 여성통계 발간 (격년) 	-
보건 복지부	인구여성 정책팀 (팀원8명, 여성관련 업무 담당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및 출산지원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구·출산 및 아동관련 정책의 총괄 - 출산친화적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출산 및 여성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임신 및 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출산지원에 관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관련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총괄 및 조정 - 보건복지관련 인력의 성 평등의식 제고 -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따라서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 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

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문화정책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그 밖에 특정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상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률들은 그 대상 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중 문화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동법 제3장의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이 있다(제28조).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시책을 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의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만으로는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문화정책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와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문화정책에 투영하고,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지원시책,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문화정책과 관련법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그 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문화 정책전문가와 법률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하여 법 제정 시 현실에 부합되고, 관련 법 과의 체계에 적합한 법안을 마련한다. 둘째, 여성문화 전문가·관계자 및 법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 등을 최대한 수렴한 연구를 통해 법 제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법안을 마련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양성평등문화 개념 및 한국 여성의 문화활동 참여 실태 및 문제점 검토

문화의 개념을 이론적 의미와 정책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한다. 그 후에 한국여성의 문화활동 및 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여성의 문화향유 및 문화창조·생산활동 참여(기초예술, 문화산업 분야)로 나누어 그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여성문화활동의 전망 및 정책적 함의를 추출한다.

2)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전개과정과 외국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사례 검토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및 문화관광부 실국별 주요 추진 문화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추출하며, 이에 근거하여 제안할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제안한다.

3)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향 마련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여성문화정책 전담팀 구성과 효율적 예산 배정, 중장기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연차별 추진 결과 보고, 문화정책사업의 성별영향 평가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 방안 제시,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 및 제도시행의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다.

4) 현행 양성평등 문화관련 법령 현황 및 한계 검토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헌법)과 양성평등문화관련 국제 기준, 그리고 현행 문화관련 법령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의 이념과 목적을 명확하게 한다.

현행 문화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는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법률 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둘째 성인지적인 시각에서 관련법의 문제점을 추출하며, 셋째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 사안에 대해 검토 한다. 문화관련 주요 법률 현황은 아래와 같다.

8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분 야	법 률
문화예술	공연법, 국어기본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동학농민혁명참가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예술진흥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법
문화시설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문화미디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관 광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체 육	경륜·경정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 화 재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여성문화정책	여성발전기본법

5)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목적 및 기본 방향을 검토한 후에 입법방식을 독립입법 방식과 기존 법률의 개정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방식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법안의 구성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안은 아래 표와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의 지정)
제3장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조성	제6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제7조(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 제10조(여성문화유산지원 등) 제11조(성별문화영향평가)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설치)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문화예술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제16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용도)
제6장	부칙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5년 마다 양성평등 문화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② 기본계획의 심의기구로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를 두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 ③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④ 여성창작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문화복합공간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⑦ 문화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⑧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6)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의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와 영향력을 예측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설득력을 높인다. 예상되는 효과로는 첫째,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성인지적 문화정책은 특정한 성에 대한 혜택이 아니며 모든 이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다는 사회적 당위성을 드러내고 정책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정책 입안자 및 수행자들로 하여금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증대하고 예산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다섯째, 정책결정자의 일회성 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장기적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10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나. 연구방법

- 여성문화정책 및 법안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헌분석
- 여성문화단체 관계자, 정책전문가 및 입법 및 법학 전문가 등과의 워크숍

제2장

양성평등문화의 개념과 현실

1. 개념 정의
2. 여성의 문화활동 실태와 문제점

1. 개념 정의

가. 문화의 개념

1) 문화의 개념 정의

문화의 개념은 분석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습득하고 공유하며 전승되는 지식·신념·기술·도구·규범과 관습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을 지칭한다. 이러한 광의의 문화 개념은 문화정책이나 문화 연구의 기본틀을 제시해 주지만, 다른 한편 실제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좁은 의미의 문화는 창의적 재능을 바탕으로 심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산물 내지 그러한 창작 행위로써, 흔히 말하는 예술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된다. 창의성과 심미성은 문화의 핵심가치임에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 문화 영역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의 문화 현장에서는 기술적 대량 복제와 대중적 향유, 일상적 소비와 결합된 문화 산업 및 문화 상품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문화산업의 영역이다. 대중문화의 확산과 문화상품의 대량 소비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른바 굴뚝산업을 대체할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문화를 정의하자면, ‘창의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실용적 가치에 대비되는 미적·인지적 가치를 제공하며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인간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화산업 역시 광의와 협의의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문화산업은 문화·예술 분야를 상품화한 모든 산업을 의미하는데, 이 때 산업화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수공업적인 문화예술품에서 첨단 기술에 의한 대중문화의 소비까지를 모두 망라하게 된다. 협의의 문화산업은 문화와 예술을 상품의 소재로 하되 일부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 대중의 정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산업 영역을 의미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7)

2) 문화정책에서의 문화 개념

문화정책은 실제 정책이 실행되는 영역, 정책 대상자나 실행 기구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는데, 그 근저에는 문화의 개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

관련 법률에 나타난 문화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을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기본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²⁾을 말하며,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시설’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법인), 문화예술기금,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공공문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시책으로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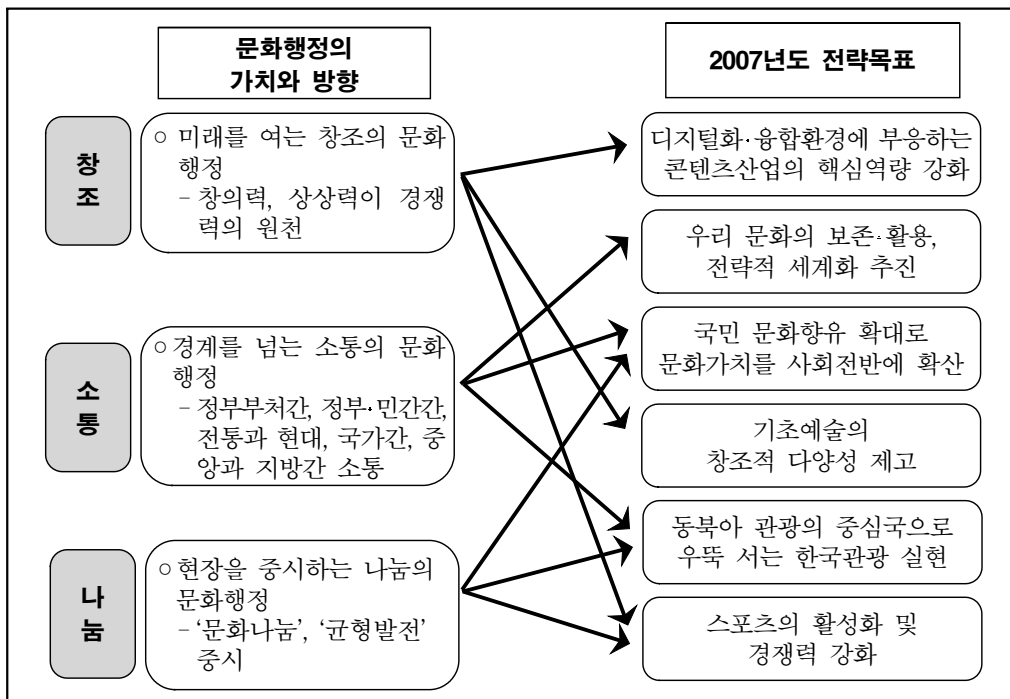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산업’, ‘문화상품’, ‘콘텐츠’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이며,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산업분야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열되어 있다. 즉, 영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 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등이 문화산업에 해당한다.

‘문화상품’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문화콘텐츠’는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로서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등이 다양한 콘텐츠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는 문화산업상의 중요한 주체들, 즉 제작자,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²⁾

2) 문화정책 관련 법률은 이외에도 다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정책의 영역에

문화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주요 시책³⁾을 간략히 살펴보면,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인 「문화강국(C-Korea) 2010」, 즉 “창의성(Creativity)과 문화(Culture)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의 다양한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견인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⁴⁾을 제시한 바 있다. 창의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산업 경쟁력과 결합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중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 2007년 문화관광부 주요 시책에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설정되어 있다.

<그림 2-1> 창조·소통·나눔과 문화정책의 방향



자료: 문화관광부, 「2007년도 문화관광부 업무계획」, 2007. 1, p.1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만을 고찰하였다. 기타 문화관련 법률의 내용은 본 보고서의 5장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3) 정부조직법(제35조)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체육 및 관광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 정책 분야를 주로 다룬다. 여기에서는 문화관광부 정책의 방향성이나 전략 목표만을 간략하게 고찰하며, 보다 세부적인 분야별 정책은 본 보고서의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참조할 것.

4) 문화관광부홈페이지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organization/vision_view.jsp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정책 안에서의 문화 개념 및 정책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개념 및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기초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문화산업 역시 창작물이나 문화예술 용품, 문화상품, 문화 서비스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기술에 기반 한 디지털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도 포괄한다. 문화관광부의 업무 계획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의 문화 정책은 정책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른바 전통적인 문화예술이나 문화 산업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문화정책의 이념이나 목적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및 새로운 문화 창조를 통한 민족문화의 창달, 즉 문화의 자율적인 가치를 강조하는데 반해, 문화산업기본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차이를 보인다. 창의성과 같은 문화 자체의 가치, 그리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 이 양자가 한국 문화정책의 핵심적 원리로 동시에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시키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강조하려는 경향은 문화관광부의 정책 내용에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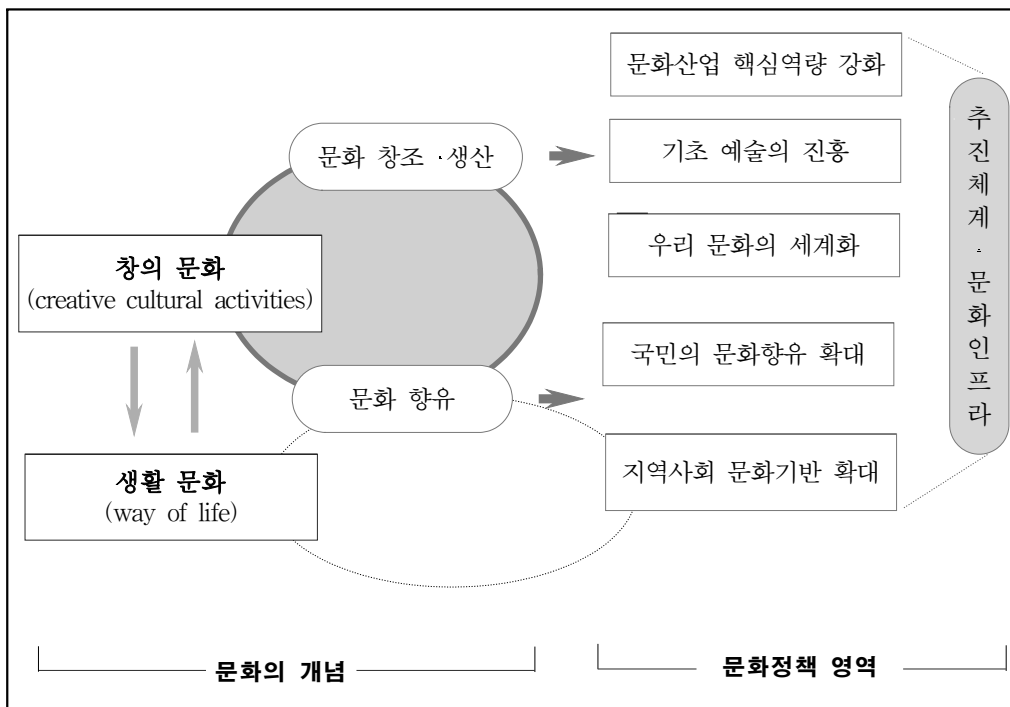
셋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기관과 대상 집단, 추진체계의 구축이 문화정책 관련법에 포함된 시책의 주요 내용이며 중앙과 지자체의 위원회 및 재단, 기금,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예술 전문단체,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회사나 전문투자조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화관광부 업무계획에서도 ‘소통’과 ‘나눔’을 강조하며 정부-민간, 중앙-지방을 연결하는 협력관계 및 현장을 중시하는 나눔의 문화 행정을 기본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적인 문화의 개념정의는 문화정책에서 나타난 문화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문화 민주화, 문화의 광범위한 상품화 등으로 인해 문화 개념은 전통적인 협의의 문화예술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문화정책은 정부주도나 공급자 위주의 행정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의 민간자율성을 중시하는 가버넌스로 전환해 가고 있다. 문화의 개념과 문화정책의 영역 간의 연관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문화의 개념을 단순화하면 광의의 생활문화와 협의의 창의문화로 나누어지는데, 두

영역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창의문화의 산물이 다시 생활 속에서 향유·소비되는 순환 과정을 통해 문화는 사회조직 및 일상생활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문화정책 또한 문화의 창조 및 생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문화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화 생산에 있어서는 기초예술의 진흥과 창의성 개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향유에 있어서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산과 문화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문화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처럼 문화 생산과 문화 향유의 질적 양적 향상을 통해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인프라의 확충도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이다.

<그림 2-2>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정책의 영역



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영역과 범위

양성평등 문화정책은 원론적으로 문화권의 확대 및 문화다양성의 확보라는 헌법적인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지향하며, 각론의 측면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화의

개념 및 문화정책의 영역들을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세부적인 정책 아젠더(agenda)들이 추출된다.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영역은 다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문화의 창조 및 생산 영역

- 여성 인력의 문화생산 참여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마련
- 창의적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재훈련 기회 및 다양한 창작 기회의 제공
- 여성의 감수성과 양성평등한 가치를 표출하는 대안적 문화컨텐츠의 창출 및 확산 지원
-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확산 지원
- 우리문화의 세계화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 문화교류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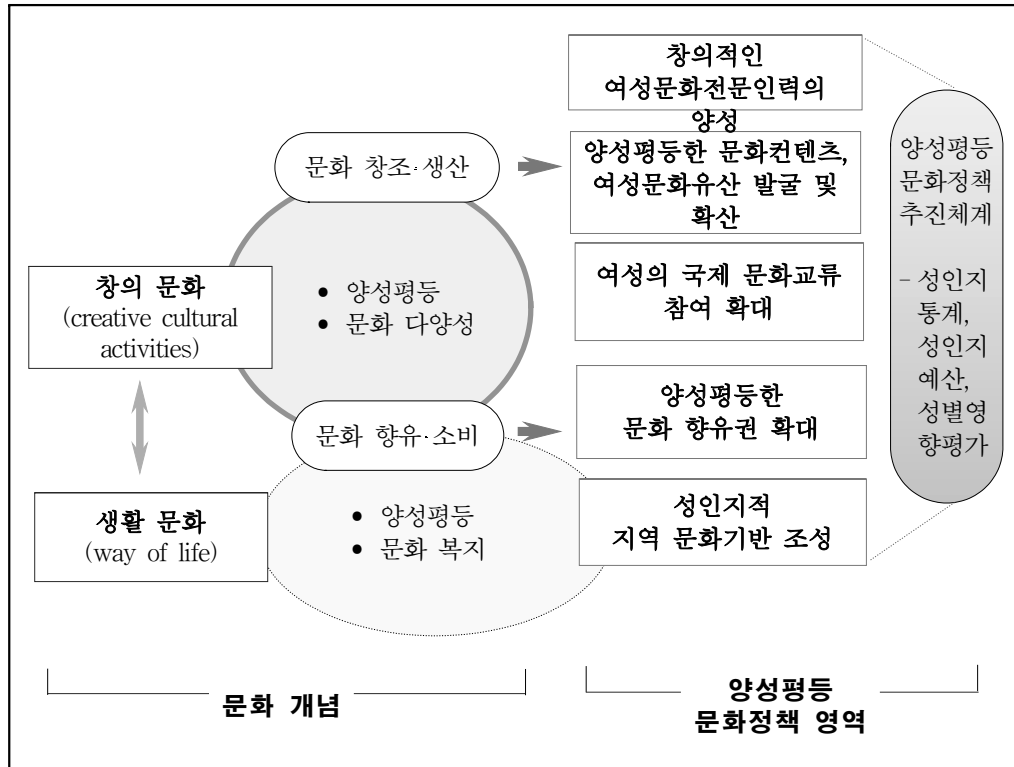
2) 문화의 향유 및 소비 영역

- 여성 및 소수자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및 양질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의 개선
- 지역사회 공공문화시설의 주 이용자인 여성들의 문화수요 파악, 공연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방안 마련
-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향유 프로그램의 확산

3) 정책기반 및 추진체계

-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기초자료인 성인지 통계의 생산(문화인력 통계 및 문화 향유에 관한 통계 등)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 양성평등 문화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역량 강화
- 주요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실시와 성인지 통계의 작성 등

<그림 2-3> 양성평등 문화 및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념도



2. 여성의 문화활동 실태와 문제점

가. 한국 여성의 문화 향유 실태

문화 향유의 확대는 문화정책의 기초로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권(cultural rights) 보장으로 직결된다. 문화권의 의미는 국민 누구나가 문화적인 경험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또한 자신의 문화적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데 있다. 둘째, 문화 향유층이 늘어나고 문화향유자의 취향과 안목이 향상되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이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즉, 문화산업이 안정된 수요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의 생산을 지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층화된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유인하는 생산-소비 간의 선순환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의 200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민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6대전략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목표는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 인간과 문화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계층, 지역, 성별, 인종·민족, 장애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의 확립은 문화 향유권 보장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문화향유 확대 정책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 향유의 질적 제고를 통한 문화주체로서의 역량 강화라고 하겠다. 문화산업을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신지식경제 기반과 개인미디어(personal media)의 발달을 감안하면 문화의 향유와 소비 역시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지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문화 상품은 단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정보, 테크놀로지, 기호와 상징, 서비스 등이 혼합되어 있고 결국 소비란 사용자의 ‘수행적’ 과정을 내포한다. 가령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특정 문화상품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보다는 콘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패러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증식하고 문화적 경험의 질을 향유하는 ‘과정적인 소비행위’가 중시된다. 결국 문화 생산 뿐 아니라 문화 향유에서도 ‘창의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김예란 외 2005: 26). 문화향유 확대정책 역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문화 전반의 창의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향유자들이 문화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평등한 시각의 문화향유 확대 정책이 여성들을 단지 소극적인 문화소비자로 대상화하거나 특정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고착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예를 들면 소극적 여가선용 위주의 취미교육이나 아내/어머니의 전통적 역할모델에 기반한 교육 등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문화향유를 통해 문화적인 가치를 습득하고 아울러 문화주체로서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들의 문화예술 관람실태, 문화예술 관련 시설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여성들의 문화 향유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문화예술 관람 실태

여성들의 문화향수 실태한국인들의 문화향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로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문화향수 실태조사』가 있다.⁵⁾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1년에 몇 회나 관람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관람경험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으며 대체로 여성의 관람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중문화보다는 기초예술 분야(문학, 미술, 고전음악, 연극 등)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관람률이 높은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문화예술을 주로 향유하는 층이 여성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연장을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머무른다면 문화 향유의 질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게 된다. 즉 단순히 한번 관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자주 집중적으로 접하면서 심미안을 기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경우는 남성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에서 보듯이 평균 관람횟수는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약간 높으며, 장르별로 여러 번 집중적으로 관람한 사람의 비율 또한 남성들이 다소 많다.(4회 이상 관람했다는 응답 남성 28.8%, 여성 25.8%)

<표 2-1> 지난 1년간 장르별 예술행사 관람 경험

(단위:%)

	문학행사	미술전시	클래식 음악회	전통예술	연극	무용	영화	대중가요/ 연예
여성	5.1	8.2	4.1	4.5	9.6	1.2	58.5	10.7
남성	3.8	5.3	3.0	4.2	6.6	0.3	59.3	9.4
전체	4.4	6.8	3.6	4.4	8.1	0.7	58.9	10.0

자료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6.

5)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으나, 이 자료에 기초하여 문화 향수에서의 성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 연구 역시 기본 수치의 남녀 응답률 차이를 소개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성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표 2-2> 예술행사 관람 횟수

(단위:%)

	관람한적 없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평균(회)
여성	33.5	17.7	13.8	9.3	25.8	100.0	4.65
남성	35.0	14.1	13.2	8.9	28.8	100.0	4.67
전체	34.2	15.9	13.5	9.1	27.3	100.0	4.66

자료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6.

<표 2-3> 예술행사 관람(참석)에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시간없음	비용이 많이 듦	관심있는 프로그램 없음	관련정보 부족	교통 불편	시설 불편	함께 할 사람없음	기타	계
여성	26.9	33.9	16.7	12.8	4.7	3.7	1.1	0.1	100.0
남성	33.2	25.9	19.7	12.6	4.7	2.6	1.1	0.3	100.0
전체	30.0	30.0	18.2	12.7	4.7	3.1	1.1	0.2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6.

<표 2-4>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 - 7개 대도시

(단위: %, 백원)

		지출률	0~5만원	6~10만원	11~15만원	16~20만원	만원	만원	무응답	평균(백원)	지출평균(백원)
월평균 문화활동비 지출액	남	66.9	47.8	12.3	3.5	1.4	1.2	0.7	0.1	309.38	461.91
	여	64.6	49.9	9.1	3.6	1.1	0.4	0.6	0.4	263.37	406.45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남	87.7	34.5	24.1	5.7	10.1	8.0	5.1	0.3	1162.52	1326.33
	여	80.0	46.9	20.1	4.1	5.1	2.0	1.1	0.2	616.83	771.04

출처: 문화관광부, 『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 연구』, 2002

예술 행사에 참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시간 부족’을 주로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경제적 요인이 여성들의 문화예술 관람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표 2-4>를 보면 문화활동비 지출이나 여가활동비 지출 비용은 남녀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

문화 향유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관람비율의 양적 비교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그러나 향유의 질적인 측면이나 향유의 장애요인 측면에서는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성들은 소극적인 문화 소비자를 넘어서 적극적인 문화향유자가 되어 스스로의 문화역량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남성보다 다소 불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화예술 전반에 관심은 많으나 집중적인 관람 경험이 다소 적은 편이며 경제적 장애로 인한 제약을 남성보다 많이 느끼고 있다.

문화적 욕구, 문화향유에의 욕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원하는 욕구만큼 문화향수의 기회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욕구충족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충족도가 더 낮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예술 감상’을 하겠다는 응답도 여성(10.4%)이 남성(7.2%)보다 높았으며, 앞으로 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 역시 여성(76.2%)이 남성보다(71.4%)더 많았다. 여성들의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된다(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2005: 176~7).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나 자신의 욕구만큼 문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결핍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방면에서 문화향수가 증가하며, 여가시간 부족이 문화향수의 장애요인이 됨과 동시에 여가시간만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문화향수를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 문화시설 이용실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기반이며 문화향유와 더불어 문화 교육, 나아가 문화생산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공문화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등 문화시설을 방문한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으며, 이 시설에서 문화행사에 참석한 경험 또한 여성들이 많았다(표 2-5). 이러한 수치는 지역 수준에서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주체가 여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용하는 문화예술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이 수요자인 여성들의 수요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설학원과 차별화되지 않는 취미 및 강습 프로그램이 많고, 특히 여성을 ‘주부’나 ‘어머니’로 전제하여 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

다.6) 단순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양질의 심도 있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문화컨텐츠의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표 2-5> 문화시설 방문경험

(단위:%)

	시군 구민회관	문화예술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대학사회 문화교실	사설 문화센터	없다
여성	12.3	12.7	9.0	4.2	2.4	14.5	12.2	1.3	6.1	55.3
남성	10.1	9.9	6.0	3.0	1.9	11.1	12.4	1.5	3.1	61.0
전체	11.2	11.3	7.5	3.6	2.1	12.8	12.3	1.4	4.6	58.1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6.

나. 한국 여성의 문화 창조·생산활동 참여 실태

한국 여성의 문화 창조 및 생산 활동의 실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성 잠재인력은 많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핵심인력으로 경력을 지속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입직 - 직업 훈련 - 승진 등이 일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 진출 현황이나 성별 인력 구성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 장에서는 기존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반적인 여성인력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입직 - 직업 훈련 - 승진 등이 일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취업자의 경우도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고 특정한 자격증에 의한 관리나 인력 DB의 구축 등도 다른 분야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문화관광부·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여기에서는 문화 창조 및 생산 분야를 기초예술 및 문화산업의 두 분야로 대별하고, 각 영역에서 다시 잠재인력과 전문 인력을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6) 김민정, ‘문화인프라와 지역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제1차 정책워크숍』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2007. 5. 16).

1) 기초 예술 분야

가) 여성 잠재인력

기초예술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들, 즉 잠재적인 문화전문 인력 중 여성의 수와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체능계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2003년 65.6%에서 2006년 66.7%로 다소 늘었고, 특히 예체능계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비율은 2003년 29.1%에서 2006년 39.8%로 10% 포인트 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늘어나는 고학력·양질의 여성인력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창작분야 및 산업분야의 핵심인재로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정책의 중요한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계획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문화예술 인력의 성별 분리통계, 여성문화예술인 DB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와 취업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인턴십,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표 2-6> 계열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단위: 명, %)

	석 사			박 사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2003>	64,259 (100.0)	25,592 (39.8)	38,667 (60.2)	7,240 (100.0)	1,715 (23.7)	5,525 (76.3)
인문계	6,921 (100.0)	2,770 (40.0)	4,151 (60.0)	668 (100.0)	288 (43.1)	380 (56.9)
사회계	14,219 (100.0)	4,863 (34.2)	9,356 (65.8)	959 (100.0)	167 (17.4)	792 (82.6)
공학계	13,796 (100.0)	1,712 (12.4)	12,084 (87.6)	1,758 (100.0)	93 (5.3)	1,665 (94.7)
자연계	6,177 (100.0)	2,711 (43.9)	3,466 (56.1)	1,425 (100.0)	436 (30.6)	989 (69.4)
의약계	4,430 (100.0)	1,889 (42.6)	2,541 (57.4)	1,905 (100.0)	517 (27.1)	1,388 (72.9)
예체계	3,695 (100.0)	2,425 (65.6)	1,270 (34.4)	220 (100.0)	64 (29.1)	156 (70.9)
사범계	15,021 (100.0)	9,222 (61.4)	5,799 (38.6)	305 (100.0)	150 (49.2)	155 (50.8)
<2006>	69,834 (100.0)	31,241 (44.7)	38,593 (55.3)	8,909 (100.0)	2,432 (27.3)	6,477 (72.7)
인문계	7,526 (100.0)	3,449 (45.8)	4,077 (54.2)	811 (100.0)	364 (44.9)	447 (55.1)
사회계	16,674 (100.0)	5,992 (35.9)	10,682 (64.1)	1,403 (100.0)	300 (21.4)	1,103 (78.6)
공학계	12,698 (100.0)	1,604 (12.6)	11,094 (87.4)	2,201 (100.0)	168 (7.6)	2,033 (92.4)
자연계	5,985 (100.0)	2,614 (43.7)	3,371 (56.3)	1,613 (100.0)	538 (33.4)	1,075 (66.6)
의약계	5,285 (100.0)	2,575 (48.7)	2,710 (51.3)	1,975 (100.0)	616 (31.2)	1,359 (68.8)
예체계	4,295 (100.0)	2,865 (66.7)	1,430 (33.3)	447 (100.0)	178 (39.8)	269 (60.2)
사범계	17,371 (100.0)	12,142 (69.9)	5,229 (30.1)	459 (100.0)	268 (58.3)	191 (41.7)

출처: 『2005년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 및 학생수』,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통계 원자료,

나) 여성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

① 직업적 위상과 경제적 안정성에서의 성별 차이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위상과 경제적 안정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2003년과 2006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성 문화예술인의 직업지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남녀간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전문직 종사자는 57.8%에서 67.9%로 크게 늘어났으나 전문직과 준전문직을 합한 수치는 큰 변화가 없다. 반면 무직/은퇴자의 비율은 9.8%에서 16.7%로 크게 늘어나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전문직과 무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예술인 내부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인지 아니면 표집 과정의 오차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고위관리직 비율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중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직위로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표 2-7>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직업별

(단위: %)

조사 년도	성 별	사례수	무직/ 은퇴	고위 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육체 노동자	기타	계
2003년	남	1354명	6.8	2.0	63.6	7.7	3.8	3.6	1.6	10.9	100.0
	여	593명	9.8	0.5	57.8	17.4	1.9	2.2	0.0	10.5	100.0
2006년	남	1,306명	12.4	3.5	60.1	6.1	6.0	1.8	2.7	7.3	100.0
	여	694명	16.7	0.9	67.9	5.9	3.2	0.7	0.0	4.8	100.0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2006.

취업상태를 보면 2003에 비해 2006년에는 자유전문직이 크게 늘어나고(28.5% → 36.5%) 임시고용직이 감소한 것(24.5% → 9.8%)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 자영/고용주가 줄어들고 무직/은퇴자(9.8% → 16.7%)가 늘어난 현상은 여성문화예술인의 취업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자유전문직, 임시고용직, 무직/은퇴에서 남성보다 비율이 높고, 자영/고용주는 남성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표2-8>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취업상태

(단위: %)

조사년도	성별	사례수	자영/ 고용주	자유 전문직	정규 고용직	임시 고용직	기타	무직/ 은퇴	계
2003년	남	1354명	21.6	30.6	30.4	10.6	-	6.8	100.0
	여	593명	10.1	28.5	27.3	24.3	-	9.8	100.0
2006년	남	1,306명	16.7	32.3	30.4	8.2	0.0	12.4	100.0
	여	694명	7.2	36.5	29.5	9.8	0.3	16.7	100.0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2006.

여성 문화예술인의 소득은 2003년에 비해 2006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소득의 측면에서는 남성과의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며 생업을 유지할 만한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여성 문화예술인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월평균 문화예술 관련 수입이 200만원인 이상인 여성의 비율이 2003년 10.8%에서 2006년 21.6%로 2배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 정도, 즉 월평균 개인 수입이 201만원 이상인 여성문화예술인의 비율은 35.3%로 남성(58.5%)보다 낮은 수준이다.

남성들은 문화예술 활동 뿐 아니라 다른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반면 여성들인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문화예술 관련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여성(23.1%)보다 남성(28.4%)이 오히려 높지만, 개인의 전체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남성(3.1%)이 여성(8.6%)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여성문화예술인의 개인 수입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업을 갖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작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클 뿐 아니라 그 효과성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9>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활동관련 수입

(단위: %)

조사 년도	성별	사례수	없다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50 만원	51~100 만원	101~200 만원	201만원 ~	무응답	계
2003년	남	1,354명	32.3	13.7	3.5	8.4	11.2	11.3	19.6	-	100.0
	여	593명	27.7	13.7	5.4	8.6	12.8	21.1	10.8	-	100.0
2006년	남	1,306명	28.4	5.9	3.8	9.3	9.9	15.0	27.8	2.1	100.0
	여	694명	23.1	5.3	3.2	9.4	9.2	28.2	21.6	2.6	100.0

자료: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2006.

<표 2-10>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가 개인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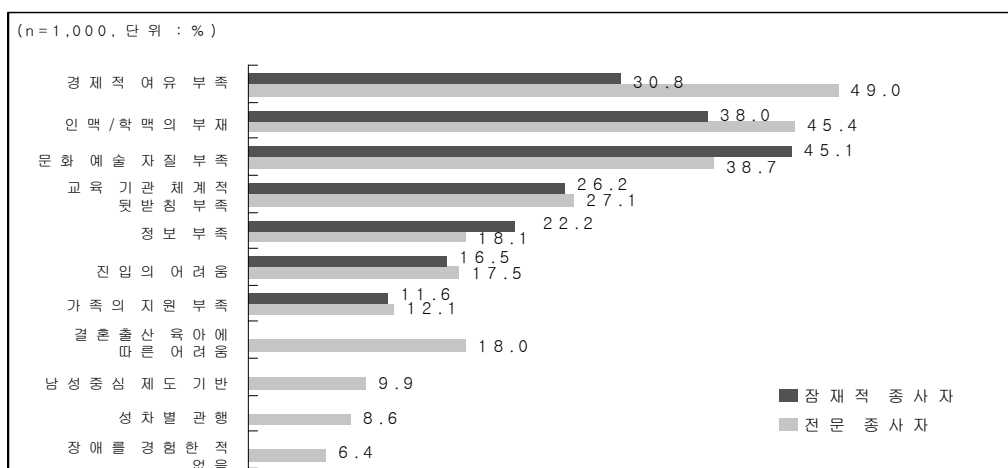
(단위: %)

조사 년도	성별	사례수	없다	100만원 이하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무응답	계
2003년	남	1,354명	5.2	15.8	7.4	12.4	22.8	36.4	-	100.0
	여	593명	8.8	27.3	15.5	19.4	14.3	14.7	-	100.0
2006년	남	1,306명	3.1	13.9	9.1	12.3	23.0	35.5	3.1	100.0
	여	694명	8.6	17.6	13.1	19.7	19.3	16.0	5.6	100.0

② 여성문화예술인 활동에서의 장애 요인

문화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장애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경제적 여유 부족”(49.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맥·학맥의 부재”(45.4%), “문화예술 자질부족(38.7%)”의 순서였다.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 개인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문화전문인력 10명 중 2명 정도(18%)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장애요인으로 응답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일과 가족을 양립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주로 학생층인 잠재적 종사자 집단은 장애 요인으로 문화예술 자질부족(45.1%), 인맥/학맥의 부재(38.0%), 경제적 여유 부족(30.8%)을 꼽았다.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보다는 문화예술 자질 문제나 인맥·학맥의 부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여성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장애경험



자료: 문화관광부,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2005.

2) 문화산업 분야

가) 여성 잠재인력

문화산업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고 있다. 직무의 범위도 창작 뿐 아니라 기획, 마케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잠재인력을 명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문화예술 분야의 학위취득자들은 문화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인력이기도 하다. 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분야로서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관련학과와 재학생 비율을 보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의 여학생 비율은 40%를 넘어서는 수준인 반면 게임 관련 학과는 20%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문화산업은 새로운 분야로써 타 산업에 비해 조직적 위계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잠재적 여성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1> 2년제·4년제 대학의 문화산업 관련학과 여학생 비율 (2005),

(단위:명, %)

구분	분야	입학정원	재적학생계	여학생계	여학생비율(%)
2년제	영화	2,462	4,960	2,055	41.4 %
	게임	2,495	8,116	1,686	20.8 %
	애니메이션	8,258	24,490	9,186	37.5 %
4년제	영화	2,279	10,271	4,565	44.4 %
	게임	1,852	9,573	1,859	19.4 %
	애니메이션	6,836	34,315	14,672	42.8%

출처 :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실태 및 양성방안』, 2006.

나) 문화산업 여성 전문인력 현황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여성비율은 4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통적 산업에 비해 여성들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만화(56.2%), 출판(54.9%)에 여성이 많은 반면 방송(25.2%), 게임(20.2%) 분야에는 여성 진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2> 문화산업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산업	2003			2004		
	남	여	여성비율	남	여	여성비율
출판	128,671	108,676	45.8	124,745	100,341	44.6
만화	1,415	1,142	44.7	4,020	5,165	56.2
음악	28,619	33,936	54.2	30,131	36,739	54.9
게임	30,149	8,955	22.9	37,547	9,504	20.2
영화	20,329	17,779	46.7	21,053	10,845	34.0
애니메이션	2,761	2,624	48.7	2,177	1,423	39.5
방송	23,583	8,062	25.5	22,845	7,685	25.2
광고	19,693	11,786	37.4	17,340	11,514	39.9
캐릭터	3,321	2,936	46.9	5,278	3,008	36.3
디지털 교육 및 홍보	7,551	3,802	33.5	4,412	3,15	41.7
계	266,092	199,698	42.9	269,548	189,378	41.3

출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2005⁷⁾

여기에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등 4개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영화산업⁸⁾

영화산업의 경우 조사대상 직무 중 여성인력의 비율은 남성을 100으로 할 때 평균 45.2%였으며 직무에 따라서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남성과 여성이 반반씩 종사하는 직무는 미술직 뿐이었으며 마케팅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직무인 반면, 촬영이나 조명 분야는 여성이 매우 드물고 녹음 분야는 여성 응답자가 아예 없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직무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즉, 마케팅이나 제작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반면 다른 직무에서는 여성들의 임금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마케팅

7) 2006년도 <문화산업 통계>에는 문화산업 종사인력에 대한 성별 구성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문화정책 전 분야의 통계에서 성별 분리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양성평등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8) 문화산업에서 경력과 임금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하의 내용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3개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문화산업 분야 여성인력 실태 및 양성방안』, 에 근거한 것이다.

팅 분야는 여성들이 집중된 직무이면서 임금조건도 양호해 여성 진출에 유리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미술 분야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44.7%)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영화산업은 아직 직무상의 성별 분리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영화산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여성이 많이 진출한 일부 분야(마케팅 등)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미술이나 기술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양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3> 영화산업 직무별·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영화 직무	임금격차 비율 (남성=100)	성별 직무구성비율 (남성 = 100)	경력년수
1	제작	170.2	58.8	5.06
2	연출	77.3	42.2	4.32
3	미술	44.7	100.0	5.34
4	촬영	60.7	6.9	4.90
5	조명	61.9	21.1	5.36
6	녹음	-	-	8.60
7	특수효과	50.5	50.0	3.00
8	후반공정기술직군	83.8	42.9	5.75
9	마케팅	198.9	325.0	3.59
10	연기	-	-	4.43
11	기타	7.2	14.3	4.36
	계	95.4	45.2	4.86

자료: 노동연구원, 『영화산업인력 직무 및 근로 실태 조사』, 2005. 원자료 재분석

출처: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실태 및 양성방안』, 2006.

②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를 보면, 조사에 포함된 직무의 여성 구성비는 영화(45.2)보다 훨씬 높아(82.0)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는 영화보다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애니메이션 여성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할 정도에 불과하였다. 직무별 여성집중도를 보면 배경(설정) 담당자 중 여성은 남성의 두 배에 이르는 반면, 총감독에는 여성이 전혀 없었다. 연출감독,

프로듀서, 애니메이션 기획자 등은 여성비중은 매우 낮은 남성 집중 직무로 나타났다.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기획, 감독, 연출과 같은 핵심 직무에 진출한 여성은 많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획자나 프로듀서, 감독과 같은 핵심 직무에 여성이 진출한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금격차비율 : 애니메이션 기획자 55.6, 프로듀서 81.5). 또한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배경설정이나 애니메이터 직무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표 2-14> 애니메이션산업 직무별·성별 경력년수와 임금격차

	애니메이션 직무	임금격차 비율 (남성=100)	성별 직무구성비율 (남성 = 100)	경력년수
1	총감독	-	-	18.73
2	애니메이션 기획자	55.6	33.3	7.96
3	프로듀서	81.5	5.0	10.87
4	캐릭터디자이너	92.0	100.0	5.21
5	배경(설정) 담당자	64.7	206.7	6.90
6	레이아웃	66.1	61.1	11.63
7	연출감독(콘티)	33.3	5.6	13.82
8	애니메이터	72.2	111.6	9.49
9	촬영담당자	109.9	84.6	6.18
10	편집담당자	105.3	50.0	4.78
11	미술담당자	65.9	83.3	5.55
12	2D감독	69.7	12.5	15.96
13	기타	67.3	147.4	7.17
	계	61.0	82.0	9.36

* 임금과 직무의 비율은 남성 100%를 기준으로 한 비율임

자료: 노동연구원(2004), 『문화인력(애니메이션 부문) 실태 조사』원자료 재분석

출처: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실태 및 양성방안』, 2006.p.42.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 여성종사자들은 영화 분야에의 여성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성별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슷하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는 핵심 직무에 진출한 경우에도 남성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영화의 일부 직종에서 여성들이 성공을 거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여성이 집중된 직무일수록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뚜렷하여 여성집중 직무에 대한 저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③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의 조사결과를 보면 일차적인 특징은 여성 종사자가 남성의 37.3%에 불과해 여성의 진출이 가장 저조한 분야이다. 직무의 성별 구성을 보아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진출해 있는 직무는 전혀 없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시나리오 (66.7), 일반관리직(64.8), 홍보/마케팅(55.2), 그래픽 디자이너(53.8) 등이며 개발직이나 프로듀서 등에는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시나리오와 홍보마케팅 분야는 여성이 비교적 많이 진출해 있으면서 남성과의 임금격차도 거의 없어 여성에게 유리한 직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관리직은 핵심 역량과 관련된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임금수준은 남성의 74%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게임 산업의 핵심 분야로 볼 수 있는 게임 PD에 여성이 진출한 경우 남성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15> 게임산업 직무별·성별 경력 년수와 임금격차

	게임 직무	임금격차 비율 (남성=100)	성별 직무구성비율 (남성 = 100)	경력년수
1	게임 PD	159.7	5.9	5.81
2	게임마스터 (게임운영자)	95.5	49.0	3.35
3	컴퓨터 프로그래머	97.9	19.1	2.54
4	그래픽 디자이너	63.2	53.8	2.54
5	시나리오	102.0	66.7	2.60
6	게임기획자	83.7	29.9	3.25
7	사운드 크리에이터	-	-	7.50
8	H/W 개발	64.4	7.7	4.71
9	시스템 엔지니어	53.4	5.6	2.63
10	홍보/마케팅	90.0	55.2	3.28
11	일반 관리직	74.4	64.8	3.02
12	기타	120.1	42.9	1.40
	계	80.1	37.3	2.95

*자료: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5), 『게임(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출처: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2006,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실태 및 양성방안> 44쪽.

전체적으로 게임산업은 직무에 의한 성별 분리 이전에 여성의 진출 자체가 매우 저조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게임 PD와 같은 핵심 직무로 진출한 여성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역시 극소수의 예외에 불과하다. 시나리오, 홍보마케팅 등 일부 직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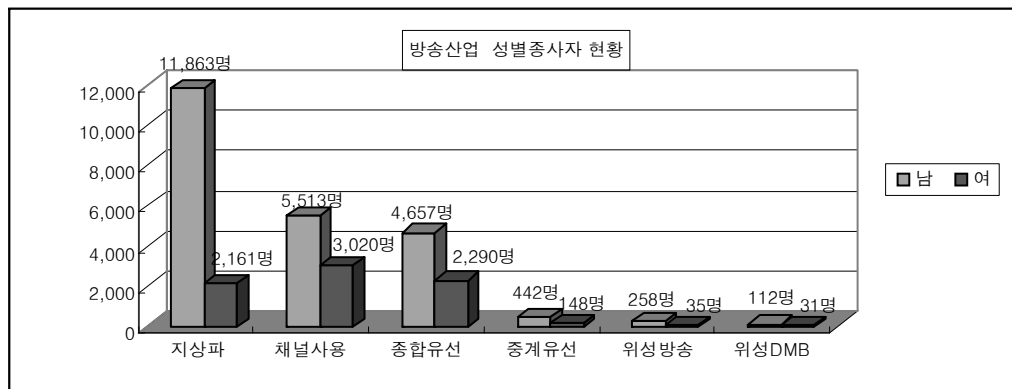
여성비율이 높고 있으며 임금차별도 거의 없어 여성에게 유리한 분야라고 하겠다. 반면 그래픽 디자이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남성의 6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술개발이나 프로그래머 등 핵심 직종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④ 방송산업⁹⁾

방송산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25% 전후로 전체 인력의 1/4 가량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계 중 여성인력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채널사용사업자(PP)로 여성인력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여성인력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2006년 고용비율은 남성 83.7%(11,448명) 대 여성 16.3%(2,233명)이다. 이는 고용이 안정된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가장 미흡함을 의미한다. 위성방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진출 연한이 낮은 신규사업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여성인력의 고용비율도 13.1%로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아나운서와 용역 및 계약직이 여성 비중이 높으며, 방송사의 미래의 고위관리직과 경영진이 될 수 있는 기자와 PD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다수이다(이종구·김순영 2006).

<그림 2-5> 방송 분야별 종사자 성비(2005)



출처: 방송위원회,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5.

9) 방송산업 여성인력 실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정책 워크숍의 발표 원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정윤경,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를 위한 소고 - 방송문화산업계 현황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제1차 정책 워크숍」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5. 16).

지난 10여년 간 방송계 여성인력이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적 증가는 여성고용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지상파 방송의 인력 구조를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승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구조는 여성의 경력기간을 단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임금격차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방송분야 여성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보다 6세 정도 낮으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평균 급여가 남성의 78% 수준에 불과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참조)

<표 2-16> 방송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년수 및 급여 비교

	성별	근로자수	연령	근속년수	급여총액
전체 근로자	계	6,584,715	37.7	5.8	1,887,507
	남자	4,540,948	32.9	6.6	2,108,732
	여자	2,043,767	35.9	4.0	1,395,979
문화, 예술, 방송관련 전문가	계	57,503	32.9	4.6	2,172,185
	남	29,845	35.9	5.9	2,425,036
	여	27,658	29.7	3.6	1,899,340

출처: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4.

여성의 방송산업 진출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비정규 풀타임직’ 증가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여성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산업에서도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프로젝트형 노동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단기 비정규직 고용’, ‘비공식적인 연고 네트워크에 의한 취업’, ‘다기능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직무 수행’, ‘복수의 직업에 취업’,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중하위 수준의 미디어 산업 직종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익희 2003). 방송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 고위간부 및 정규직 여성의 부족은 방송제작물의 생산과정 및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이 배제되는 기제로 사용되며, 이러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양성평등한 방송콘텐츠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산업의 여성 전문인력의 진출 현황은 산업별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직무에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여 남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동일 직무에 종사하

는데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집중된 직무가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되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여성인력을 단기적인 소모인력으로 간주하는 관행들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 문화산업 여성인력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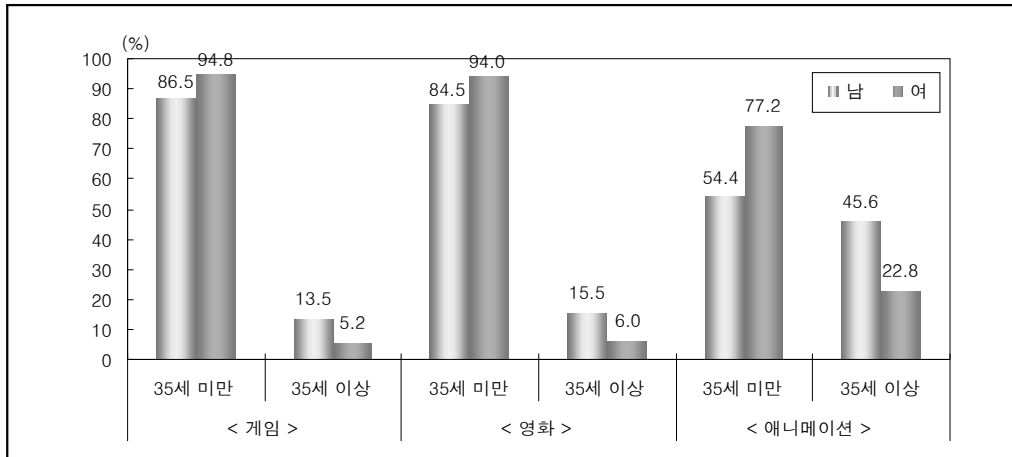
① 여성인력의 조기 퇴출 및 사장화 우려

문화산업 인력의 성별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연령이 훨씬 젊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은 신생산업이므로 타 산업에 비해 종사자의 연령이 낮은 편이나,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인력은 남성에 비해 평균연령이 뚜렷하게 낮다. 여성들은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낮은 직종에서 일하다가 30대 이후가 되면 핵심인력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문화산업을 떠나는 조기퇴출 인력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2-6>에서 3개 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화·게임·애니메이션 산업 모두에서 35세 미만의 인력은 여성이 더 많은 반면 35세 이상 인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2~3배가 더 많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게임이나 영화의 경우는 전체 여성 종사자의 95% 이상이 35세 미만의 젊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종사자의 연령이 높은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35세 이상 종사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한다.

문화산업 여성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에서도 경력 지속,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전문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2006). 문화산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잠재인력 중 여성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한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40%가 넘는 문화산업에서, 종사자의 성별 연령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창의성이나 예술성에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여성인력의 조기퇴출은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이다. 여성인력의 중장기적인 양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계획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2-6> 기존 문화산업 인력 조사의 성별 35세 미만 연령의 분포



* 출처: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산업)종사자실태조사』, 2005.

** 출처: 노동연구원, 『영화산업인력 직무 및 근로 실태 조사』, 2005.

*** 출처: 노동연구원, 『문화인력(애니메이션 부문) 실태 조사』, 2004.

자료: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실태 및 양성방안』, 2006.

② 성별 직무분리와 여성인력의 주변화

여성들은 문화산업 내의 다양한 직무 중에서도 특정 직무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3개 산업 실태조사 결과(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2006)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경우 그래픽 디자이너가 조사대상 여성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영화산업의 경우 마케팅이 22%,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는 애니메이터가 43%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여성 인력이 특정한 직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하급 기술직이나 비핵심 행정업무에 여성이 몰려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기획 및 창작과 관련된 핵심업무, 전문기술 분야는 특히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 분리를 모두 성차별로 볼 수는 없으며, 영화의 마케팅 분야와 같이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몇몇 분야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문화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할 때 성별 직무분리는 여성의 경력형성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팀 작업의 중요도가 높으며, 지상파 방송이나 대규모 게임업체를 제외하면 고용안정성이 낮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연공이나 학력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임금수준이 낮아 금전적인 유인에 의해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낮다. 결국 경력

형성이 근로 유인에서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 355). 즉, 당장 임금은 매우 낮더라도 좋은 팀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리더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문화산업의 채용은 공개되기 보다는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시 고용이 많은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에서 중심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자 집단에서 창작자 집단으로 경력을 상승시켜야 하는데, 창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직무에 대한 OJT 이외에도 다양한 직무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조정, 감독 능력을 교육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 문화산업의 다른 장르와 연계된 프로젝트 경험 및 연관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요구된다(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367, 372). 성별 직무분리는 창작자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가는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직무 경험 및 타 분야에 대한 지식의 확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 인력이 일부 분야에 편중된다면 환경 및 기술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입지를 상실하게 될 위험도 커질 것이다. 게임산업의 경우 초기에 여성 CEO가 많았고 순정만화 등 콘텐츠 원작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산업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콘텐츠 산업에서 기술중심 산업으로 성격이 전환되었고, 프로그래밍이나 기술 분야의 종견인력 중 여성이 거의 없다보니 여성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수인 2006: 27).

성별 직무분리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경력형성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여성인력은 창작과 기획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소모적인 인력으로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에서 많은 여성들은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응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팀 작업이 중시되는 문화산업에서 여성을 팀장급 리더로 수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관행 때문에 경력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사례들도 있다(황정미·장윤선 2006). 문화산업 전반에서 사적 네트워크에 의한 채용이 많다는 현실도 여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키우기 어렵다. 여성들이 이른바 여성집중 직무로 몰리는 현상은 다양한 경력형성 기회의 부족, 더 나아가 여성인력의 주변화로 귀결될 수 있다.

③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생애주기 상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시기에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하는 여성들이 처해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정규직 고용이 적은

문화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은 고용관련법에 기초한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의 혜택(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직장보육서비스 등)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문화산업은 집중적인 팀 작업이 필요하고 장기 출장이나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양육기에 있는 여성들이 경력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이러한 조건에 적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는 것이다. 방송 비정규직 402명을 면접조사한 연구(이종구·김영 외, 2006)에 따르면, 응답자중 미혼자의 비율이 65.9%를 차지했으며 미혼비율이 높은 가장 높은 연출직은 그 비율이 83.9%에 이른다. 응답자 중 30대 이상의 비율이 55.8%임을 감안한다면 미혼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인 3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백선희·임유경, 2003)를 보면, 영화 일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0.2%, 영화일이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1.2%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혼 후 자녀출산 희망 시기에 대해서 ‘가능한 늦게 갖겠다’가 39.1%, 아예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응답은 2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 영화인들의 응답률은 이보다 더 높아서 ‘가능한 늦게’가 41.3%, ‘갖지 않겠다’가 24.0%로 나타났다. 게임산업 역시 20대 젊은 인력들이 밤낮으로 팀작업을 하는 조직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올라설 나이에 이른 여성인력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면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이수인 2006).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우려 및 정책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산업 여성인력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1)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가) 문화정책과 양성평등(gender equality): 기본 방향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공공문화정책도 그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정책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성중립적 (gender-neutral)’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문화정책의 특성 상 성별을 고려한, 즉 성인지적인 (gender-sensitive)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정책은 민족

문화의 창달이라는 문화적 가치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상승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이와 더불어 중시되어야 할 것은 문화 분야에서의 권리 보장과 형평성 문제이다. 문화도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재화이자 서비스의 형태를 갖게 되며,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에 국민들이 쉽게, 보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성평등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문제는 첫째, 문화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의 영역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영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한 가지 기준을 모든 영역에 통일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만족이나 결핍은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불균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성들은 적극적인 문화향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비 지출은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 인력실태를 보면 일부 직종에 여성들이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는가 하면, 대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여성들은 네트워크의 부족이나 생애주기상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균형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 진단하고 여성들의 문화 참여를 늘림으로써 문화 전반을 진흥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들의 문화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여성문화유산, 여성들의 생활문화 등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확산하는 정책, 새로운 시각의 여성창작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정책 등이 그 예이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이나 콘텐츠의 다양성이 확대될수록 문화생활은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다.

나) 문화권 확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문화정책

양성평등 문화정책은 문화향유를 질적·양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문화 향유에서는 성별 불균형보다는 문화향유자로서의 여성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잠재적 욕구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들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난다. 획일화된 상업적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기초 예술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수요층으로써 여성들이 가진 잠재력은 향후 기초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지역사회의 생활주체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참가자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 내린 문화정책의 확산, 문화향유의 생활화를 지향한다면,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 집단이다.

다) 기초예술·문화산업의 진흥과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초 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성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문화예술 잠재인력은 많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전히 적다. 여성 문화예술인 및 문화산업 종사자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인력활용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가 상품화되고 문화 산업에 확대되는 최근의 사회 환경에서 공공 문화정책의 중점 방향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즉 문화적 가치 및 콘텐츠가 지나치게 상업화·획일화되어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여성인력의 진출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적 가치나 여성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또는 하위문화 subculture)를 표현하는 새로운 콘텐츠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여성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당장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나 콘텐츠를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가) 객관적 자료, 중장기 전망에 입각한 양성평등 문화정책 확립

여성의 문화 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초자료와 성별 분리통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고 그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입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기초통계자료를 수집할 때 이에 대한 성별 분석 보고서도 동시에 생산하여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축적해야 하며, 이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산업 관련 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하거나 여성들의 차별적 수요를 분석하는 심도 있는 연구성과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대규모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한 성별분석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 및 정책 수요를 밀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문화예술 및 산업 분야별로 체계적·순차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성별분리통계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나) 지역 여성문화의 진흥 - 문화향유 정책의 중점 대상으로서의 여성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문화관람률에서 성별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다만 여성들의 관람 경향에서 남성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성들의 문화 향유가 대중문화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여성들은 미술·공연예술·고전음악·무용·문학 등 기초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또한 남성에 비해 다양한 장르를 관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국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문화향유 수준은 남녀가 유사하지만 앞으로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성이 더 높으며, 이는 현재의 여성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잠재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향유 지원정책은 그 효과성 및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적 양적으로 더 풍부한 문화향유에 대한 여성들의 잠재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령이나 생애주기,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문화향유의 수요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적 문화 프로그램, 소수자 여성을 위한 문화교육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여성은 각 지역에 설치된 문화예술 시설의 주요 이용자이므로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체계적인 진단과 점검을 정례화해야 하며, 여성이용자의 의견을 환류(feedback)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주부, 어머니’로만 보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각종 문화시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이고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주체인 여성들을 문화시설 운용의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상업화된 문화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전시나 공연을 지역 문화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여성 문화생산자와 향유자가 만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 교육, 전시 및 관람, 생산자들의 작업 공간, 문화 동아리 활동 등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운영도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다) 체계적인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는 문화 분야 잠재인력은 여성 비중이 매우 높다. 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여성 잠재인력들이 사장되지 않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유망한 잠재인력의 사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여성 유망분야, 혹은 여성의 진출이 희소한 유망 분야에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인맥 형성 등에서 불리한 여성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출하여 경력을 축적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여성 창작자 지원, 대안적 양성평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품이나 문화상품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문화 콘텐츠 공모전과 선정작에 대한 제작 지원, 여성들이 양질의 대안적 문화컨텐츠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 관련 기금 운영이나 지원제도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문화예술인의 실태 파악, 경력 축적을 위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산업 노동시장에서는 직업별 직능별 성별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저임금의 소모적 노동력으로 일하다가 조기에 퇴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여성 전문인력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필요한 직업 훈련 및 재훈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라) 문화예술 정책의 시민사회 기반확대 및 파트너십 강화

문화부문의 노동시장은 대규모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이 극히 소수이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취약한 비정규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통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술 장르, 산업 분야나 직업별로 자발적인 여성 문화예술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이들이 정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적인 민-관 관계의 구축은 여성 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파급효과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제3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

1.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도입과 확대
2.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1.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도입과 확대

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전개과정

밀레니엄을 맞으며 ‘문화발전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동력이 된다.’는 점이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부각되면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여성문화정책도 외견상으론 정책과제로서 틀을 갖추고 지정된 정책 추진체계 하에 실질적인 시행의 단계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주요 추진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에서조차 여성의 문화적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아예 관심이 없기도 하다.¹⁰⁾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시작점은 1983년에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될 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1995년에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이념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문화전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에 중앙정부의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여성발전의 종합계획인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을 시행 중에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년~2002년) 중 문화 관련 추진과제는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로, 각종 문화수준 평가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화 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제1차 계획시기에는 ‘문화향수실태조사’ 및 ‘문화예술인실태조사’시 남녀별 평가요소를 2000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년~2007년)중 문화 관련 추진과제는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로, 각종 문화예술 실태 조사 시 여성 관련 평가 요소 도입,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제 2차 계획은 그동안 양성평등 문화정책이 문화향수자로서 여성, 특히 주부계층의 문화향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0)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50

면, 문화유산 분야의 과제를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가도구(지표, 지수, 기본통계 DB 등)의 정립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후, 2003년 여성문화정책의 추진환경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새 정부 양성평등 문화정책 제안”¹¹⁾에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은 법적·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전 국민의 의식과 문화가 함께 변해야 가능한 것이고, 바로 이로 인해 여성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핵심 소관부처는 문화관광부라고 보고 있다.

이어서 2004년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의 5대 기본방향¹²⁾과 여기에 27대 추진과제를 정하여 『창의 한국』을 발표하였다. 그 5대 기본과제 중 첫 번째에서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한다고 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립’이 포함시켰다.¹³⁾

<표 3-1> 성인지 여성정책 추이 변화와 여성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개요표

정책	의의	과제	문화관광부 관련과제 시행과제
여성정책심의 위원회(1983)	- 여성문제를 정책 담론화 단계	없음	없음
제6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1987~1991)	- 여성정책의 궁극적 지향 을 새로운 문화형성에 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설정하는 대신, 여 성의 인력활용,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통한 여성개 발의 달성만을 전망	없음	없음
여성발전기본 법 제정(1995)	- 양성평등 이념이 생활 속 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을 명시	-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 제 실시	없음

11) (사)여성문화예술기획, 『문화연대, 미즈엔, 여성신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우먼타임즈,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또 하나의 문화 공동 작성

12) 문화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화,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등을 5대 과제로 정하였다.

13)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22

정책	의의	과제	문화관광부 관련과제 시행과제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1992~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을 문화분야에서 최초로 사실상 수용 - 급변하는 가족문화, 자녀교육문화, 시민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참여 방안마련, 사회문제 극복에 이바지 유도 - 문화 분야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참여 확대, 아동·청소년 환경보존 등의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정책과제로서 제시되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가족문화 및 자녀교육환경의 정착: 가족문화 정착, 자녀교육환경정화 -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의 개선 - 여성의 창의력 개발과 창작예술활동 지원,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여성회관의 문화기능확충, 지역문화활동의 장마련, 창장활동 지원 	없음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998~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국가 정책과제 제시 -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 강조, 문화관련 여성정책의 범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계획 - 문제점: 명료함 부족, 지나친 추상성 및 비실효성, 여성의 문화생산성 보다는 참여확대 정도에 머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생산활동과 가사의 이중부담 완화 -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의 문화 활동 지원,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각종 문화수준 평가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 다양한 여성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문화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3~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남녀평등실천 추구, 성주류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과 '평등문화 확산'의 두 영역 체계화 강조 - 여성이 문화예술활동의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조: 전문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지원, 문화산업영역에 여성인력 진출 지원,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 여성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재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남녀 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 여성문화정책사업의 핵심부처로 문화관광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새정부 양성평등 문화정책안 - 2004 『창의한국 발표』 - 각종 문화예술실태 조사시 여성관련 평가요소도입 -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지원 -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

출처: 양애경, 2003, p.22-27.;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22.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문화 TF를 운영하여, 문화관광정책에의 성 관점 반영을 위한 내부적 기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는 2001년 여성부가 중앙부처로 신설되고 6개 부처(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부·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 또는 관련 과가 설치된 이래 여타의 부처에서 성 인지적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천 의지를 보인 초유의 일로서 특히 그 의미가 각별하다.

문화관광부에서 여성문화TF를 추진하게 된 데는 아래의 자체 보고문건 <표3-2>에서 보듯이, 크게 두 측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의 문화정책 및 행정전반에 대한 재고의 측면으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여성관점의 문화’가 부재하는 현실을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런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조직자체에 대한 점검의 측면으로, 말하자면 문화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미흡이라든지 문화관광부 조직문화의 양성평등성 정도의 진단 필요와 같은 측면이라 하겠다.

조직 내부로부터 제기된 이 같은 자가검진이 여성문화T/F의 직접적인 추진배경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확실하게는 여성정책의 흐름 또는 방향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다. 2003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어이기도 하는 ‘성 주류화’ 전략에 의해 모든 정책영역에서의 성관점 반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탓이다.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부 내 조직혁신의 기운 역시 이 같은 TF운동을 가능케 하는 데 일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¹⁴⁾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문화정책과제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보다 유연하고 창발성을 갖춘 사고체계 필요성이 설득력을 갖추면서 여성문화 TF의 구성이 한층 용이했을 수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이러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사무관급 담당관인 여성문화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문화관광부는 2003년 4월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을 ‘상시적 과정’으로 시스템화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함. 2003. 4 - 2003. 8까지의 제1기 혁신위원회에서 운영된 6개 TF는 구성원을 공모하고 직급을 넘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가령, 여성문화TF의 경우 6급 여성팀장에 국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함(문화관광부(2004),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표 3-2> 여성문화T/F의 추진배경

여성의 관점이 결여된 문화행정에 대한 반성	-사회 전반을 주도한 남성 가치의 팽배 -보편성을 가장한 남성 중심의 문화 정책 수행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의 제도적 참여 미흡 및 조직내 소수인 여성의 시각이 배제된 편향된 조직문화 형성
21세기 지식·정보 기반사회에서 여성성 가치의 올바른 평가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기반의 문화 중심 사회 -3F(Female, Feeling, Fiction)의 특성, 즉 섬세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감성적인 여성성의 역할과 비중 증대
문화 가치 구현을 위한 여성의 관점 반영 필요	-국민의 삶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수행에서 여성의 시각과 수요 적극 반영 필요 -경제적 가치와 대비되는 문화의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보편성 범주에 필수적인 “여성 관점의 문화” 적극 조장 필요
양성평등 문화행정 및 조직 문화 확립	-새롭게 발견된 여성의 가치와 증대된 여성의 사회참여를 문화행정에 반영할 필요 -남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균형 잡힌 조직문화 형성

출처: 문화관광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여성문화 T/F, 2004, 참조

여성문화T/F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및 행정 구현’을 기치로, 문화관광부 내 주체적 여성문화 확립을 위한 선도역할을 통해 여성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양성평등문화 실현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각 영역에 여성 관점 반영한 정책과제 발굴·문화 분야 여성인력 양성·활용 제도화 및 효율적 여성문화정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세부 운영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된 T/F 운영방향은 세 측면이었다. 첫째는 여성 문화적 관점의 주요 정책과제 발굴로, 문화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적용 및 여성의 문화적·창조적 역량 계발 여건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여성문화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여성 문화예술 활동 지원확대로 문화다양성의 토양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인력 양성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는 남녀 모두에게 주체적·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차이의 인정과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료의식을 확립하여 조화롭고 평등한 직장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¹⁵⁾

15) 이수연, 『문화관광정책의 성 분석 및 성 주류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5, p.34 참조

나. 해외 양성평등 문화정책 사례

여성평등 문화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전 일반국가정책에 있어서 여성에 관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성업무전담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차별의 문제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상된 것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가 계기가 되면서였다. 이때 여성의 각종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고 해를 거듭하면서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였다. 따라서 현재 외국의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여성관련 업무 전담기구의 현황을 정부에서 기구가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독립기구로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¹⁶⁾, 호주¹⁷⁾, 스웨덴¹⁸⁾ 등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여성정책을 위한 독립기구를 정부의 부, 처 혹은 실의 형태로 설치하고 있다. 여성정책기구는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포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을 성별 분석에 기초하여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여성정책 개발과 집행,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부처 내 하부조직에 의해서 여성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국가로는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을 다루는 기구를 정부 부처의 하나의 국의 형태로 두는 나라의 특징은 소속된 부의 고유 업무에 상관없이 여성고용, 복지, 폭력 문제 등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취급한다는 점이다.

셋째,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로 덴마크, 중국, 핀란드, 일본,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 기관장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특히 여성 권한척도의 순위가 높고 위원회의 경험이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유형을 많이 볼 수 있다.

넷째, 여성담당 장관을 둔 경우로 인도네시아, 스웨덴,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부처에 독립적인 여성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장관을 중심으로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내부조직형태가 단순하고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된다는

16) 캐나다 ‘성분석국(The 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은 전체 연방정부의 성분석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창설 되었으며, 다른 연방정부서와 기관들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성분석을 통합하는 과정을 확립하도록 돕는다.(김재인, 2001)

17) 호주의 ‘페모크라츠’라는 호주의 여성정책기구와 여성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서 이는 관료(Bureaucrat)와 페미니스트(Feminist)의 합성어로 호주의 여성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공직에 진출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적인 목적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관료로 진입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18) 스웨덴은 독립기구와 여성장관제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점이 있다¹⁹⁾.

<표 3-3> 해외의 성인지 정책 담당기구

구분	성인지 정책 담당기구	국가
I	독립기구로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스웨덴
II	부처 내 하부조직에 의해서 여성관련 업무가 담당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인도, 말레이시아
III	위원회 형태로 여성관련 업무 담당	덴마크, 중국, 핀란드, 일본, 미국
IV	여성담당 장관 배치하여 여성관련 업무 담당	인도네시아, 스웨덴, 영국

여성정책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보다 본 연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의 주요 국가들의 문화정책 속에 보이는 여성관련 문화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들일 것이다.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런 주요국가에서는 정책기저에 ‘양성평등’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라마다의 특성에 따라 그 접근 방식이나 정책적 방향은 약간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별 연서문화정책의 원칙과 세부 중심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1) 영국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DCMS:문화·매체·체육부)는 적절한 예술적 활동경험을 가진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지원하여, 공공문화생활에 여성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2004년까지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DCMS와 관련한 또 다른 영역은 여성이미지를 폭력성과 포르노그래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Living Without Fear”라는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

2) 포르투갈

포르투갈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은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들의 활동영역은 교육 영역 뿐 아니라 직업생활에서도 또한 점차 증가되어 갔다. 1990년 문화영역에 종사하

19) 이온죽 외,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과 여성정책』, 제 65집, 2002. 참조

20) 양애경, 2003; Council of Europe/ ERICarts, 2002. 참조

는 여성의 비율이 40% 차지했다. 이후 여타의 평등촉진정책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배제되었던 영역에 점차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3) 스웨덴

1974년 문화관련 정부법안에서 문화정책을 “언어, 무대, 이미지, 소리 그리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 더 나아가 성인교육, 조직활동 영역 내의 주단, 일상적인 삶과 문화유산 보존”이라고 정의하고, 구조와 규범의 투명성을 가정하는 양성평등을 향한 정책의 주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성주류화(mains-streaming)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규범이나 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스웨덴 문화정책의 젠더관점은, 전문 예술·예술가 정책, 수용자로서의 시민, 창의적 활동에 의한 참여자로서의 시민 등의 세 개의 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힘입어 박물관과 같은 곳은 세대 변화와 맞물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 이래로 문화분야에서의 여성 디렉터의 수가 국가 전체에서나 지역적 레벨에서 모두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이것은 잘 드러나고 있다.

4) 스위스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에 관한 법률은 1996년에 강제되었으며, 연방정부는 1995년에 개최된 제 4회 UN World Conference의 결정을 반영한 실행조치(action-plan)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실행조치는 성인지적 통계와 양적인 연구를 요구하며, 미디어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스테레오타입화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위스 평등국(The Swiss Office for Equality)은 매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훌륭한 성과를 낸 문화, 미디어 프로젝트에게 상을 준다.

5) 오스트리아

여성을 소수 민족, 이민자와 더불어 더 나은 보편적 조건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문화적 소수자”(Cultural Minorities)로 취급하여, 문화분야 양성평등정책으로 예술과 미디어에서의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여성업무와 소비자보호부(Department for Women's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안에 있던 예술과 문화에서의 직업집단에 관련한 사항이 최근 연방사무국(The Federal Chancellery)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으며, 예술과

미디어에 있어서 성평등(gender equality)에 접근하기 위한 대안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술과 미디어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국가적 논의는 유럽지역 비교연구의 한 부분으로 계속되어왔으며, 여전히 예술, 미디어, 광고분야에서 여성의 고용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6) 독일

대중 문화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업무(cultural affairs)는 여성지방장관의 수가 매우 많으며, 이들은 여성에 의한 문화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금을 마련하고, 여성예술가사무국과 간은 독립조직체를 지원한다. 연방정부단계에서는 40세 이상의 전문여성예술가에게 Gabriele Munter Prize 라는 상을 수여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수많은 문화적 협회와 프로그램의 토대가 다져지고 있다.

7) 이탈리아

The First National Convention of Women in Arts” 이 2001년 2월에 ‘평등기회부서’(The Department for Equal Opportunities-Prime Minister’s Office)에 의해 조직되어 예술과 문화영역에 여성들이 폭넓은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여성 고위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에 여성예술문화위원회가 평등기회부서 내에 설립되었다.

8) 캐나다

SWC(State of Women Canada)는 캐나다의 성평등을 촉진시키는 연방 에이전시이며,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를 추구한다. SWC는 “헤리티지 포트폴리오(Heritage Portfolio)”의 일환이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지향하는 주정부의 보고서이다. 이것은 캐나다의 문화적 발전과 유산(heritage)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 캐나다 역사 속에서 여성을 기념, 유산 프로그램으로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촉진, 예술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촉진, 문화적 기업체와 방송에서 여성 참여를 촉진,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강화, 공연예술에서의 여성들의 고용 장벽과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움, 국가 정체성 형성의 여성공헌의 강화, 연방 법률·정치·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공식적 언어 위원회에 여성 요구의 수용 등의 항목들

을 포함하고 있다(『성평등을 위한 계획』(Plan for Gender Equality), 1995-2000).

<표 3-4> 각 국별 여성문화 정책의 원칙과 영역

국 가	여성문화정책의 원칙	세부 중점 영역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소수 민족, 이민자와 더불어 더 나은 보편적 조건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문화적 소수자’(Cultural Minorities)로 취급 ○ 문화분야 양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 policy)으로 예술과 미디어에서의 양성평등 ○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과정 개혁(성주류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미디어, 광고 등의 여성 고용상태 - 상위직 여성의 고용상태 - 여성예술가의 사회적 상황 -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소득수준 - 결정권자의 위치의 여성비율 증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과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활동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총체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기구(Status of Women Canada : SWC)를 통한 여성과 문화 관련 활동 지원 ○ 캐나다의 문화발전과 문화유산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를 고양 ○ 캐나다 정체성에 대해 여성들의 진보적인 기여 인정 ○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2000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여성발굴 -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여성지원 - 예술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육성 -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지위 개선 - 공연예술영역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장애 및 고용 장벽 제거 - 문화적 정체성의 표명 및 문화적 차이를 보존 가능하도록 원주민 여성들 지원 - 모든 민간 방송국은 캐나다 방송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성역할 묘사 규칙”을 고수해야 함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이 분포되어 있음 ○ 북경 여성회의 이후 핀란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성주류화(mainstreaming)라는 입장을 공식화 함 ○ 1995년 성평등법(Equality Act of 1995)을 제정한 데 이어, 1997년에는 평등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 함께 하는 삶(working life) - 의사결정 메커니즘 -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평의회(the arts councils)나 지역위원회(municipal board)에서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고수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문화관련 정부법안에서 문화정책은 “언어, 무대, 이미지, 소리 그리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 더 나아가 이는 성인교육, 조직활동의 영역 내의 수단, 일상적인 삶과 문화유산 보존” 이라고 정의 ○ 구조와 규범의 투명성을 가정하는 양성평등을 향한 스웨덴 정부의 주요한 출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업예술과 예술가 정책 -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참여자로서의 시민 - 2000년 이후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문화영역에 여성책임자 수의 증가 - 예술지원위원회(The Arts Grants Committee)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지원금지급을 분석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활동영역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에 초점 ○ 적극적 우대조치(positive action) 자극 ○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 1990년대에 이 논쟁은 여성에서부터 소수민족(여성과 남성을 포함)의 문제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코틀랜드 정부는 ‘평등전략’(Equality Strategy)이라는 이슈를 모든 스코틀랜드 정책입안의 핵심으로 삼음 - 여성과 문화에 관련하여 문화매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는 ‘공포가 없는 삶’(Living Without Fear)이라는 보고서 발간 - 여성, 폭력, 포르노에서의 DCMS의 역할을 언급

2.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가. 실국별 주요 추진 문화정책의 내용과 방향

문화관광부는 2006년에 확립한 ‘창조’, ‘소통’, ‘나눔’ 등의 문화행정의 3대 가치를 2007년에 정책과제로 구체화 하여 ‘창조적 콘텐츠로 미래를 풍요롭게’, ‘신 한류로 한국문화 확산을 지속가능하게’, ‘문화나눔으로 대한민국을 신명나게’라는 3대 역점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고 2007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제시하고 그에 따라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전략 목표들을 발표하였다.²¹⁾ 본 장에서는 문화관광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전략 목표는 디지털화·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 강화이다. 21세기 경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의 창작 및 유통이 핵심역량으로 부각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삼는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방통융합 등 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콘텐츠 창작 환경 강화 및 투자·유통환경 선진화를 이룬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관광부 내에서 기능을 개편하고 지원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까지의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여 문화산업 관련 중장기발전 계획을 2007년 상반기까지 수립·추진한다. 대외적으로는, 콘텐츠 창작소재의 다양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콘텐츠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런 콘텐츠 창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성인지적인 쟁점을 고려하자면 여성적 삶, 여성도구, 여성의 역사적 사실, 여성관련 신화, 여성관련 예술품등 여성 소재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이다.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 교원 및 학생을 확보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인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력양성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프로듀서, 마케터, 글로벌 비즈니스 선도자 및 시장개척 에이전트 등을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부는 이미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반영한 문화기술(CT)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2007년 3월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산학연계 중심의 문화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 범용기술 개발·확산을 위

21) 문화관광부, 「2007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2007, p.3

한 ‘문화콘텐츠 기술연구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업에서, 몰성화된 일반화된 지원보다는 핵심인력들의 성비를 분석하여 여성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재취업 기회 증대에 적극 활용,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등 여성적 삶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다.

<표 3-5>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

전략목표	성과 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디지털화·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창작 환경 강화 및 투자·유통환경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융합환경에 대응, 콘텐츠 정책 추진 역량 제고 ○ 콘텐츠 창작소재의 다변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 콘텐츠산업 투자 여건 대폭 강화 ○ 디지털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소재의 문화콘텐츠 개발 ⇒ 성인지적 영상사업지원 ⇒ 남녀평등의식에 근거한 콘텐츠 공모전 ⇒ 유아용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 지원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배포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양성 ○ 문화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인력들의 성비를 분석하여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 ⇒ 여성의 재취업 기회 증대에 적극 활용,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등 여성적 삶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형태 적극 활용

이외에도 ③저작권 기반의 산업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콘텐츠 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콘텐츠에 대한 단속 및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고 한다. 또한 ④ 미디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익성을 제고 하여 신문 등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진흥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신문의 멀티미디어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 목표는 우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전략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문화적 경쟁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에 따라 성과목표와 세부전략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었다.

① 민족 문화자원의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정체성 정립하고자 한다. 이것은 민족문화의 원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대 창작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민족문화 자료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역사적으로 폄하되어온 여성적 문화의 하나인 생활공예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 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한류는 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한류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산의 걸림돌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라 전략을 차별화 하여 한류를 세계화한다. 한류 거점지역인 동경, 상해, 런던을 중심으로 한스타일 해외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스타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한식·한복·한옥·한지 분야 기초 연구,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우수디자인 공모, 해외진출 지원 대표브랜드 선정 등 분야별로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한류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한류의 향유자들의 성별선호도에 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구체화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우선 수교기념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들을 집중 개최하고, 동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과의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그리고 UN 본부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성인지적인면을 고려하여 국제 여성문화단체의 교류를 지원하여 외국과 한국여성문화단체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이로써 다양하고 활발한 국제교류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

전략목표	성과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우리 문화의 보존과 활용, 전략적 세계화 추진	민족 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및 문화정체성 정립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현대적 창작 지원 ○민족문화 자료의 현대적 활용 및 민족 자긍심 고취	⇒ 민족문화에 대한 성별 분석적 데이터 구축 ⇒ 민족문화성별영향분석, 계층자성별비율
	한류의 지속·확산, 세계화 기반 마련	○한류지역을 아시아권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 지역별 전략 차별화 ○[한스타일]의 세계화 추진 ○문화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강화 및 저작권 보호 조사	⇒ 한류의 향유자 성별선호도
	해외 문화활동 지원시스템 강화	○국가별 문화환경을 감안,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 지중 (50%) ○코리아센타 설립 확대 및 기능 강화	⇒ 활동의 주체자, 참여자, 관람자, 성별분석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집중 개최 및 잠재시장 개척 ○UN 본부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강화	⇒ 국제 여성문화단체 교류지원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구조적으로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다문화 사회로 인해 불균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통과 나눔을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국민을 문화향유자로 확대하여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계획이 세워졌다.

①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야간개장을 확대하여 문화관광이라는 사회서비스를 증진하며 생활권 내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한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문가 및 생활체육지도자, 문화관광해설사를 주민 밀착 시설에 배치한다. 특히 효과적으로 주민 밀착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강좌 이용자 성비에 맞추어 제공하여 교육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권내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활권내의 성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 지원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양극화를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에 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은퇴자·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별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애인·이주민 등 특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나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문화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노인인구를 살펴볼 때 여성노인인구가 월등함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③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며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대학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시설 등 지역문화환경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여성예술전문인력들을 적극 활용이 불가피한데 성인지적 입장에서 전문인력의 성별을 분석한 데이터 구축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④ 인간과 문화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한다. 생활공간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 하며 국가 이미지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현장 설치를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중심의 생활공간을 조성할 때, 여성을 문화의 주변인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향유자·운영자의 중심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3-7>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II

전략목표	성과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국민 문화향유 확대 로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문화관광 사회서비스의 증진 및 체계적 전달 ○생활권내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관광시설에 성인지적 서비스(이용방식, 시간, 종류 등등)에 대한 지원 ⇒성별선호도 설문조사 및 원인분석 ⇒강좌 참여자 성비를 고려한 교육전문가 배치 ⇒문화공간 이용자의 성별분석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문화 지원 확대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나눔 사업」의 본격 추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특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여성노인인구에 대한 이해와 특성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소외계층의 성별구분에 따른 문화활동빈도와 경향, 문화활동의 차이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문화역량 강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예술과 문화유산을 특화한 지정거점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산업의 창조·연구·보급 역량 강화	⇒지역문화의 전문예술문화인력과 문화향유자의 성별분석
	인간과 문화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생활공간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 ○국가 이미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 정책 강화	⇒여성을 문화 생활공간의 중심자로 고려

네 번째 전략 목표는 지식기반경제와 문화복지를 이끌어갈 원천이 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초예술에 창조적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 예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예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예술관련 법제를 개선한다. 건강한 예술 생태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 전통예술 진흥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을 제정한다. 또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평가를 내실화한다. 이렇게 예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예술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열린 예술정책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통의 강화를 유도한다.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술창조전문인력 현황에서 남성과 여성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보이는 남녀성비와 모순되는 경향을 보인다.

② 예술 진흥 재원의 다변화를 꾀한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확대하며 내실화하고,

단계별로 결연시스템을 보완하여 예술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문화 예술 소비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사실상 문화 예술 소비를 창출 여건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소비자에 대한 성별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원해야만 서비스와 소비 모두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예술 창작·유통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우선, 예술 장르별로 전략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예술영재 양성 종합계획 수립 및 예술영재캠프 운영 등을 지원하고 국악예술고의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국악전공자 졸업자 인턴제를 실시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시스템 또한 정비한다. 한편 예술산업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예술 작품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더불어 예술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그룹을 확보하여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조하여 예술의 산업적 발전에 지원한다. 특별히 예술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때 성비를 고려를 하여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여성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 3-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전략 목표 IV

전략목표	성과목표	세부사업	성인지 사업 추가제안
기초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	예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예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예술 관련 법제 개선 ○열린 예술정책체계 구축을 통한 소통의 강화	⇒여성을 예술진흥의 중심자로 확대 고려
	예술 진흥 재원의 다변화	○예술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력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	⇒문화예술 소비자에 대한 성별 분석
	예술 창작·유통의 경쟁력 제고	○예술장르별 전략적 지원정책의 강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활용 시스템 정비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성별에 따른 선호 장르분석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성별 분석

비교적 사회구조적으로 남성 여성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은 서구사회에서도 남성 여성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가부장적이 사회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의 균등한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도모를 위해

더욱더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성인지적인 이해와 반영 속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관광부 발표한 2007년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도출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 계획은 15년 이상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연구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정책과 사업들에서 성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정책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자기들의 정책사이의 연계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 연구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확산,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문화관광부의 2007년 주요사업도 효과적인 시행과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쟁점과 연계 시킨 고려가 필요하다. 스포츠산업의 상품성과 시장성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성인식적인 쟁점을 연계할 수 있는가? 스포츠산업 아카데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관점에서 성인지적인 연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 태권도공원 조성에 있어서 어떤 성인지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품격과 테마를 갖춘 관광목적지를 개발할 때 성인지적 입장에서 양성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예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인지적인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기초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적으로 불균형적인 현 문화창조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그동안의 성 분석은 주로 여성과의 관련하여 여성들의 권익만 높이려는 정책으로만 여겨졌지만 이것은 향후 양성 모두에게 권익을 위한 것으로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성인지적 고려는 모든 정책분야로 확대하고자 함이다. 특히 국가발전계획의 수립에서 문화 부문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국가의 문화정책의 방향이나 비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항목이 되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별특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성인지적 이해가 수반되어 수행된 문화정책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성정책을 여성부만의 업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 수립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적인 문화정책을 펴기 위해 위에 언급한 문화관광부의 「2007 주요업무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3-9>에서는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는 성인지 정책 수행의 성별영향평가요소들로는, 사업별 시설이용자 또는 참여자 성별 특성 분석,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 여성적 특성이 고려된 프로그램 개발 노력,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동방안 모색, 여성적 관점의 적극 고려 여부, 여성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할당제 부여 여부, 성별영향인자에 관한 사전연구조사, 여성의

생활구조와 삶의 형태가 고려된 구체적인 정책지원방안 모색,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남녀의 인력구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 모색, 양성평등의식이 충분히 고려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지원, 여성전문인력 적극양성과 육성방안 모색 등이다.²²⁾

<표 3-9> 문화 및 문화정책 환경 개선 및 문화소외자를 위한 정책

사 업	성인지적 검토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예시사업 포함)
문화정책 환경개선	○ 시설이용자 성별분석
	○ 성별 이용방식, 시간, 종류 등 분석이용자의 직업분석
	○ 참여자 성별차이 분석
	○ 여성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 경우 여성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프로그램 개발
문화 소외자	○ 여성문화봉사단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노인의 성별구분에 따른 문화활동빈도와 경향, 문화활동 종류의 차이 분석
	○ 성별에 따른 건강문제의 양상이 차이가 날 것에 대한 사전 연구분석

출처: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82

나. 양성평등 문화정책 예산 현황

성인지적 예산은 공공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 남녀의 우선순위와 요구사항의 다양한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책수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즉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중립적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공공지출이 보다 성균등한 방식으로 지출되도록 계획,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것이며, 정부의 예산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요구에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은 ‘equity/equality’, ‘경제효율성’, ‘여성권리의 실현’, ‘효과성’, ‘good governance’, ‘책무성’, ‘투명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고하여 책정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성인지 정책을 펴는데 대단히 중요한 검토사항이 되는 것이다²³⁾.

22)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82

23) 류정아,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양성평등 문화정책 종합계획 토론회』 문화관광부 p.60

<표 3-10> 문화관광부 '07년 성인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 사업명	예산			비고
		'05	'06	'07	
일반회계	양성평등 문화환경조성	170	300	300	기획조정
	여성 국극 춘향전	-	-	100	예술
	서울여성영화제	300	300	350	문산
	국제문화정책지원 (아시아 여성문화정책 세미나 등)	92	92	-	문정
	여성결혼이주자 대상 한국어교육	-	200	400	국어원
	오페라하우스 여성화장실 확충	-	700	-	예술
책특회계	공연장 보육시설 설치 운영	-	-	200	국립극장
	소계	567	1,598	1,157	
관광개발 진흥기금	여성관광정책 국제 심포지움	100	-	-	관광
문예 진흥기금	마로니에 전국 여성백일장	10	12	-	예술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국 어머니 종합생활체육대회	70	75	공모 (820)	체육
	여성스포츠교류 지원	35	33		"
	전국어머니 탁구대회	40	40		
	한국여성스포츠회	6	6	공모 (500)	"
	한국여성체육학회	20	20		"
	전국여성생활체육강좌	320	348		"
	여성축구대회	66	30	-	"
	여성축구활성화	726	800	800	"
	여성축구권역리그	-	200	200	"
	여성축구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	-	300	"
	서울컵 국제여자 핸드볼대회	42	-	46	"
	소외장애인(여성) 생활체육지원	-	30	30	
	소 계	1,325	1,582	1,724	
	합 계	1,997	3,186	3,074	

출처: 문화관광부 기획조정팀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1~5번 사업의 경우 '07년부터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성 인지 예산사업에서 제외

<표 3-11> 2005년~2007년 문화관광부 양성평등정책 예산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문화관광부 예산	양성평등정책 예산	비율
2005년	11,846	5.62	0.05%
2006년	13,689	18.52	0.14%
2007년	14,155	15.50	0.11%

출처: 문화관광부, 「양성평등 문화정책 종합계획 토론회」, 2006

문화관광부에서 양성평등문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이 2005년도에는 1.7억 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약 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부의 의지가 예산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문화관광부의 예산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양성평등문화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는 문화관광부 '07년 성 인지 예산현황에서 살펴보면 '양성평등 문화환경조성', '여성 국극 춘향전', '서울여성영화제'를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전문문화생산자로서의 지원 보다는 여전히 아마추어 문화 예술향유자로서의 지원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아마추어로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인구층은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숫자적으로는 많다. 하지만 실제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거나, 문화의 주체로 창조 활동을 하는 인구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문화의 수혜자는 여성이 더 높다는 편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21세기 문화복지사회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고 균형 있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화창조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때이다.

현재의 여성들은 단순한 향수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성문화활동은 여성들의 참여와 교육 수준향상 등으로 증진된 권리의식과 가치향상욕구를 가지고 있고 문화주체로서의 여성적 경험과 욕구를 표출하고자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예술계 구조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잠재적인 문화예술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 창조 활동의 비율과, 실질적인 임금, 노동의 질 등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이와 같은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문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

제이기도 하다. 이런 가부장제로 인한 사회적 불균등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성인지적 문화정책과 이를 수반하는 사업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인지적 차원에서의 예산과 사업들을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편성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 이런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이 문화를 단순한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여성들을 예술의 주체자로 파악하고 그것이 평등문화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문화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성인지적 사업을 수행할 예산은 여성예술가 창조자 혹은 생산자양성 및 지원을 위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여성예술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문화예술의 창조와 생산 측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파악은 여성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은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문화전책 추진의 기초자료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문화정책과 성인지 관점의 결합의 당위성과 난점

성평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경제개발, 사회개발 등의 국가정책의 본질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은 모든 국가정책의 영역에서 주류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김선옥, 2003). 특히 현대의 국제경쟁력은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제도의 합리성과 윤리성, 그리고 사회, 문화, 정치 등 제반 역량의 총체적인 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 통합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온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1) 당위성

21세기는 문화가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주요 수단으로 강력하게 부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뿐더러, 한국 사회는 곧 고령과 또는 초고령화 사회²⁵⁾

24) 한국여성개발원, 『제23차 여성정책포럼』: 『북경 +10』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도전, 김양희, 주제Ⅱ : 향후 여성정책 과제, 북경+10 이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2004

에 접어들어서 절대적 피부양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건전한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대, 사회활동 비율과 영역의 확대, 사회활동의 질적 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날로 증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문화적 욕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문화정책, 즉 여성문화정책은 현재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삶의 방식의 모색인 것이다.

문화정책은 구체적인 형상물이나 행위로 가시화되는 협의의 문화예술적 차원의 문화를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광의의 문화, 즉 “전반적인 생활방식으로서의 문화”의 질적인 향상과 변화이다. 정책적인 노력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변화가 가능한 협의의 문화와는 달리 광의의 문화는 보다 오랜 시간 동안의 복합적인 요소의 총체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의 문화는 단지 양적인 정책대상의 확대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질적인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여성문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임은 분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가지는 사회적 성(젠더, gender)의 특성에 대한 분석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여성의 문화적 특성의 고려, 즉 문화적 양성평등가치와 성별 문화적 특성의 정확한 파악은 성인지적 문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된다. 특히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입안과 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이 모두 양성평등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성인지 문화정책이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의 전면적 재고찰과 재평가를 통해서 여성의 문화정책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구체화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정책은 여성적 특성과 여성적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오지 않았다. 즉 문화정책은 정책집행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책이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 대상자를 성별로 분리하여 정책효과를 미리 예상하고 정책

25) 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당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한국은 65세 노인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는 2019년에, 그리고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는 2025년에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이혜훈, 2002; 통계청, 2003,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박동석 외, 2003에서 재인용)

을 수행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화정책은 정책의 효과가 단 시간에 측정 가능하도록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개의 현상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문화정책의 집행과 수행과정의 몰성적 성격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정책이란 이제 더 이상 문화일반을 위한 보편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진 문화주체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문화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한국사회에서 그 구체성이 철저히 무시되어 온 채로 단순분할만을 강요당해왔던 여성들이 가진 보다 구체적인 문화적 욕구를 어떻게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시켜서 충족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문화 향수자의 반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여성적 문화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적 관점의 반영은 국민의 삶과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수행에서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롭게 발견 여성성의 가치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욕구들이 문화행정에 반영될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남녀 모두의 문화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미래 사회의 문화복지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여전히 여러 어려운 측면을 안고 있다.

2) 난점

가) 문화정책에서 성인지적 쟁점 도출 미비

90년대 중반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시행되고 있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쟁점과 연계하지 못하는 것에는 오래된 불균형한 사회적 구조와 편견 그리고 의지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일반적인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남성 중심으로 고려되어 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주변위에서 활동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정책에 있어서 정책시행의 주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둘째, 다수의 여성이 문화의 향수자이며, 질 높은 예술교육의 수혜자이라는 편견이다. 사실상 여성들은 가족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단순 향수자 일뿐이고 또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예술인력들조차 그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창조의 주체자로서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로는 여성과 남성이 분리된 문화예술 관련 지표를 세우는 것에 미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담당자들이 성 인지적 관점과 정책과정의 연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확산, 활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문화정책에서 여성의 관심 수렴 미흡 및 여성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수의 절대부족

성 주류화가 잘 안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성의 관심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수렴하고 그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현장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거나 그들과 가까이 일하는 여성/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예: 빈곤퇴치 정책의 경우 여성자활사업을 하는 단체의 전문가의 자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양적 참여는 많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양적 참여가 의사결정의 성 주류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위원회의 성별 참여의 균형 정책은 위원회간 참여의 편중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위원회 의사결정의 과정과 내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도청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의식 고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것,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부처내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의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다.

다) 책무성 장치 부족과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책무성 장치의 부족 또한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예컨대, 정책의 젠더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통계를 필요로 하는데 해당 분야에 그러한 통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또는 주류화 역량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와 함께 여성단체 및 젠더 관련 활동가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매우 활동적인 활동가들도 성주류화에 대하여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알려주면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성 주류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모니터 평가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단체 활동가를 위한 훈련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정책의 이질성 및 추진 주체의 다원성

문화관광정책은 정책 대상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으며 정책추진체계가 분산적인 것이 특징이다. 성 분석 대상인 정책 중에서도 관광인력교육, 문화산업인력 양성정책은 각각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그리고 역사마을가꾸기 정책은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과와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때로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하나의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문화산업정책처럼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와 문화유산정책처럼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보다 관념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그 추구하는 목표나 전략에 있어 다르거나 때로 상충될 수도 있다. 성 주류화의 모든 문화관광정책에 일원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 주류화의 설득전략도 각각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다른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을 주관하는 주체가 다원적이어서 하나의 명령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관광관련 마케팅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부의 관광 담당 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어 문화관광부의 정책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성 주류화라는 전략을 채택하더라도 모든 산하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동참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화관광정책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우선 문화관광부 본부 안에서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와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문화정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산하단체와 지자체 문화 부처 별로 별도의 제도와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⁶⁾

26) 한국여성개발원, 『제23차 여성정책포럼』: “『북경 +10』이후 여성정책의 새로운 도전”, 김양희, 주제Ⅱ : 향후 여성정책 과제, 북경+10 이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2004 p.56.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여성문화정책 기반 조성: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아젠다 수립
2. 제도와 조직 개선
3. 교육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4. 평가관리
5. 통계체계 구축
6. 여성문화인력 양성과 지원
7.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

1. 여성문화정책 기반 조성: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아젠다 수립

현재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해당 정책분야에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주요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성별 문화주체를 균형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명목적인 정책 비전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방안의 구축은 미비한 상태이다.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정 목표 시한을 정해두고,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작업들이 년차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여성문화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표 4-1>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연구 아젠다(2007~2020)

	목표	사업	예시사업
I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진행과정 및 예산구성의 성인지 분석	- 문예진흥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 문화정책국과 예술국 사업의 사후 성별 영향평가
II	여성문화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정책적 도구 마련	○양성평등 문화평가지표와 지수개발	- 양성평등문화평가지표 개발과 이를 이용한 문광부 문화정책 평가 - 타부서 여성정책과 문화부 여성문화정책의 성평등지수비교
III	여성전문인력 양성체계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전문인력 참여 확대	- 문화부의 여성전문 인력 흡수방안 모색 - 여성문화정책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IV	창조적 여성문화활동 증대 방안 마련	○여성문화활동 실태조사 ○여성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방안	- 지역단위 여성문화활동 실태조사 - 도시 규모별 여성문화활동실태의 차이점과 결과 비교분석 - 여성의 범수별 구분을 통한 문화활동 실태조사 - 여성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수요조사
V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구체적 통계자료 DB 구축	○여성문화예술 활동 기본 토계 DB 구축과 통화자료집 연간 발간	- 6여성부, 여성개발원, 문화부의 여성문화예술통계자료의 기본틀 통일방안 모색

출처: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4, p.96

<표 4-2> 중장기 여성문화정책 사업 아젠다(2007~2020)

	목표	사업	예시사업
I	여성문화자원 발굴·개발	○여성문화인물 선정 ○여성역사인물 발굴 ○여성관광자원 개발	- 여성 역사·문화 인물을 발굴하기 위한 역사학적·인류학적·고증학적 여성사연 구 사업 - 여성문화·관광연계 프로젝트 개발사업
II	여성문화예술공간확보	○여성문화예술복합센 타 건립 ○아시아 여성문화 전수관 건립	- 여성문화예술복합센터 설립계획 추진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과 재원확보방안 모색 - 아시아 여성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광주문화중심도시와의 연계방 안 구체화
III	부처간 여성정책의 협력 계획 마련	○문화부·여성부·교육 부·보건복지부·법무 부 등의 여성정책 협력방안	- 외국의 여성문화정책 담당기구의 현황 파악과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국제간 여 성문화정책교류 방안 마련
IV	외국의 여성문화정책 전담기구와 종합연계 네트워크 구축	○여성문화정책의 국제화 추진방안 모색	- 여성문화헌장 수립 방안과 유네스코의 협력방안 모색
V	여성문화헌장 수립	○여성문화정책의 사회적·법적 위상의 건고한 정립	- 여성문화헌장 수립 방안과 유네스코와 의 협력방안 모색
VI	여성문화정책 예산 100억 달성	○여성예산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여성문화정책 수립	- 여성문화정책의 차후 5년계획 작성과 여성예산의 확보

출처: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2004, p.96

2. 제도와 조직 개선

가. 여성문화정책 전담 담당부서 신설과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현재,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 과학기술부에서는 여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다(<표1-1> 참조).

문화관광부에서도 여성문화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에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가 되리가 본다. 현재 문화정책국의 문화정책과에 담당사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정도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성인지적 문화정책 추진을 전담하는 여성정책담당관은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은 문화관광정책의 성별 영향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 성 인지적 문화관광 통계 및 지표 개발 지원, 문화관광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조사 및 분석 지원, 문화관광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지원, 문화관광부 주관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 관점 통합방안에 노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담당관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여성문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여성문화정책 전문가 양성과 전문행정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쿼터제의 수용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력을 가진 곳의 <여성쿼터제> 문제는 자주 언급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성쿼터제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기반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해질 수 있는 제도적 강제력이며, 결과의 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취해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 생각된다. 즉 평등의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유엔이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분야에 여성참여를 3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정책결정자의 다수가 남성임을 고려해볼 때 성인지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 소요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여성문화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존의 여성문화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문화 정책에 여성적 관점 및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30%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인사할당제를 실시하고, 매년 신규임용의 인원수를 결정할 당시 여성문화행정인력의 필요성과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여, 단순한 여성할당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필연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할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전체 대비비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

여, 이를 승진과 새로운 임용단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표 4-3> 외국의 공공부문 할당제 실시현황

국 가	현 황
미 국	○적극적 차별보상정책 전개, 대표관료제 실현을 위해 소수인종·여성등 마이너리티에 대한 적극적이 고용시행 - 미시간주의 경우 국장급과 중간관리자급의 30~40%가 여성
영 국	○여성공무원의 평등 촉진을 위해 1984년 여성공무원행동계획 도입
캐나다	○여성이 전체 외무 공무원 중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쿼터제 도입
노르웨이	○모든 정부 및 자치구가 임명하는 위원회 및 기업이사의 40% 여성할당제
스웨덴	○모든 직장에서 양성간 평등유지 - 내각, 공공위원회, 행정관청의 성정 균형 달성(1995년 40%, 1998년 50%)
오스트리아	○연방·주 공무원 할당제
독 일	○여성비율이 50%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승진·연수 및 위원회 위원 임명시 여성 우선, 공무원 임용선발위원회에 여성 50%할당(바이에른 주)
호 주	○주 정부 여성공무원 확보 비율 규정: 호주 수도권 주:50%, 서부호주:40%

출처: 이재풍,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평등실현방안』2002 재정리

나.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구성

여성문화정책 전담 담당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여성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는 여성문화정책의 계획수립, 평가, 예산편성, 정책수행, 사후평가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양성평등문화 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 본다.

여성문화행정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기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문제도 시급하다. 특히 위원회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성인지적 관점의 고려여부와 효과성을 판단하여 효과가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위원회의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3. 교육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가. 정책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체계 마련

성 주류화 전략에 입각한 성인지 정책은 특정 부처, 특정 부서에 한정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 전 부서를 총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의 정책담당자들이 성인지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훈련’이라는 용어 대신 ‘남녀평등정책과정’ 또는 ‘양성평등의식 교육’ 등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제 8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교육기관에 여성 및 성평등 관련 교과목을 개설할 것을 의결한 것을 계기로 1991년도부터는 국공립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의식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비롯하여 각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양성평등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여성부 산하에 개설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 GO-NGO 네트워크(성인지적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

성인지적 문화정책은 단지 특정 부처, 특정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을 총괄하는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추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각계가 정책과정 전반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야말로 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핵심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부 정책담당자와 여성부 등의 관련부처, 여성문화NGO, 문화관광분야의 여성전문인과 여성인력으로 구성된 성인지적 문화정책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성인지적 문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문화관광정책의 성인지 평가와 관련해서도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지적 문화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증진하고 여성의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여성문화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존재현황에 대한 것은 전국적 또는 지역적 단위를 기준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이것은 다음의 통계체계 구축의 항목과 더불어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확보된 이후, 이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이들 집단의 활동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들이

재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집적된 이후에야 비로소 여성의 문화활동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여성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들 간의 연대감 형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평가관리

성인지적 정책은 각종 정책요소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데에서 출발해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에 일차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 내지 평가하는 작업은 성인지적 정책 추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다.

1990년대 이후 개발사업의 평가에서 시작된 성인지적 분석 도구는 점차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분석 도구, 특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평가틀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성 주류화가 여성정책의 목표로 설정되면서 각종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문화정책의 성인지 평가지표는 크게 총괄요소 평가지표와 정책단계별 평가지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총괄요소는 실이나 국, 과 차원과 같이 부서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관광부 전체로 접근될 수도 있다(이 경우 타부처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정책단계별 평가는 구체적인 사업별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이 모호해 결과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평가결과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총괄요소평가지표는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며 그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문화관광부 내의 담당기구와 담당인력, 성인지적 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규모(여성 특정적 사업, 성평등을 위한 사업 예산, 성인지 정책관련예산 등) 등이 기본적인 조직역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의 핵심 관련자인 공무원들의 성인지력과 성인지 정책 분석-추진능력도 문화정책이 성인지적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표 4-4> 정책단계별 평가지표

정책 단계	평가 항목	수행 평가지표	최종 평가지표	수정이유
I. 정책 형성	1) 문화적 상황	정책과 관련된 문화적 이슈를 성별로 구분하여 균형적으로 확인하는가?	정책과 관련된 문화적 이슈를 성별로 구분하여 각 성에 대한 정보를 균형적으로 확인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정
		정책과 관련된 문화생과 통계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확인하는가?	정책과 관련된 문화생과 통계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확인하는가?	‘통계자료’와 ‘정보’등 유사한 지표 내용을 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의 균형적 참여 수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가?		
	2) 문화적 요구	정책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문화적 요구 차이를 분석하는가? (계층, 학력, 지역, 연령별 등)	정책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문화적 요구 차이를 분석하는가? (계층, 학력, 지역, 연령별 등)	변동사항 없음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의 문화적 요구 변수(정부, 관련 문화단체, 여성단체 등의 요구)를 조사설계 또는 실태조사과정에서 포함시키고 있는가?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견해를 정책입안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정
	3) 문화적 영향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 평등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정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남녀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영향 분리예상을 하는가?	남녀에게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예상을 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정
II. 정책 결정		정책목표 설정에 여성과 남성의 문화생활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반영하는가?	정책목표 설정에 여성과 남성과 문화생활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정
		여성의 미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남성과 여성의 미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평이한 용어로 수정
		정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성별 문화적 형평성 변수를 포함시키고 있는가?	정책이 성별 문화적 차별 해소 및 평등문화 증진에 기여하는가?	형평성, 평등성 차별성 등과 관련한 항목이므로 통합하여 평이한 용어로 바꿈
		정책이 문화적 차별해소 및 평등문화 증진에 기여하는가?		
		정책대상을 남성과 여성의 삶의 정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정하는가?	정책대상을 남성과 여성의 삶의 정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선정하는가?	변동사항 없음

정책 단계	평가 항목	수행 평가지표	최종 평가지표	수정이유
III. 정책 집행	1) 성인 지적 예산 편성	여성과 남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가?	여성과 남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효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가?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통합
		예산을 여성과 남성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한 자료작성시 성별구분 된 문화활동 통계치를 사용하는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관련한 자료작성시 성별구분된 문화활동 통계치를 사용하는가?	변동사항 없음
	2) 조직 역량	성 인지 문화정책 관련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기능하고 있는가?	성 인지 문화정책 관련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조직이 성 인지 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을 얻는데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조직이 성 인지 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자원을 얻는데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3) 담당자의 성인 지성	남성과 여성의 문화적 요구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담당자의 성인지 문화정책에 대한 의식과 인지도는 충분한가?	남녀의 문화요구, 성인지 문화정책 의식 등 유사한 용어 통합
		담당자의 성 인지 문화정책에 대한 의식과 인지도는 충분한가?		
		담당자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의식 교육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담당자가 성 주류화 및 성평등의식 교육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4) 정책의 전달 체계	정책의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는가?		선행단계에서 이미 판단가능한 사항이라 삭제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근거 법령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근거 법령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성인지 문화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연계된 타부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성 인지 문화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연계된 타 부처나 부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5) 정책 집행의 유여성 과네트워크 활용	정책조직구조와 운영체제가 여성과 남성의 변화하는 문화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정책형성/결정단계에서 판단가능하여 삭제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문화정책 관련 NGO와의 네트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문화정책 관련 NGO와의 네트워크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변동사항 없음

정책 단계	평가 항목	수행 평가지표	최종 평가지표	수정이유
IV. 정책 평가 및 평가 결과	1) 양성 평등 목표 달성	정책의 결과가 양성 간 문화적 불평등 개선에 기여 하는가?	정책의 결과가 양성 간의 문화적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가?	변동사항 없음
		정책 서비스를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하게 전달하는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판단 가능하여 삭제
		정책이 전통적 성역할 의무로 인한 문화활동 제약을 감소시켰는가?	정책이 전통적 성역할 의무로 인한 문화활동 제약을 감소시켰는가?	변동사항 없음
	2) 성별 영향 평가	정책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성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가?	정책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성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가?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성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가?		현재로서는 거의 판단 불가능하고 정책형성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삭제
		정책 수혜자들에게 성별로 구분된 평가결과를 전달하는가?	정책 수혜자들에게 성별로 구분된 평가결과를 전달하는가?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를 통해 정책의 영향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명확히 측정하는가?		정책형성/집행 단계에서 판단가능함으로 삭제
	3) 평가 결과 성인 지적 활용	정책 수혜집단의 성별확인 과 수혜자 집단의 성별편중 원인을 분석하는가?	정책 수혜집단의 성별 확인과 수혜자 집단의 성별편중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는가?	분석과 시정방안 마련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두 항목 통합
		성별불균형이 나타났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가?		
		정책평가결과를 해당 분야의 성인지적 문화정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가?	정책평가결과를 해당 분야의 성인지적 문화정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는가?	
		정책수혜자들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성별 구분하여 제안하는가?		위 항목에서 동시에 고려 가능하므로 삭제

출처: 류정아, 『문화정책의 성인지 분석평가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103~106

정책단계별 평가는 구체적인 정책, 특히 단위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업의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문화관광부 전체 정책분야 중 특정한 부분에서는 여성의 요구가 통합되고 차별적 효

과가 미미하며 나아가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반면, 또 다른 부분의 성인지성이 낮은지를 찾아내어 문화정책의 성평등성을 지적해낼 수 있다.

단위사업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문화관광부의 전 영역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단계별 평가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며 우선적으로 주요 관심분야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주요 관심사업에 맞게 평가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평가의 출발점이 되며, 그에 따라 평가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평가를 위한 제반 사항이 어느 정도 확립되면 점차 대상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정책 단계별 평가지표를 일반지표로서 단위정책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내용과 수단에 따라 평가지표를 보다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5. 통계체계 구축

문화예술활동은 정책 대상이 가진 성격이나 능력 등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본적인 통계자료와 구축은 정책수행의 필수적인 준비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 문화예술활동인구 통계자료, 문화예술 분야 여성 인력 수요와 관련된 통계자료 구축이 시급하다. 전국적인 단위의 여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의한 통계자료 구축은 수요자 중심의 여성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나 현재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고, 항목별로 불규칙한 자료가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문화예술활동인구 통계자료는 문화예술활동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분야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소그룹별 문화예술활동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여성인력의 활용수요는 두드러지리라 보고(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보육의 사회적 의무 중시, 초등생의 문화예술분야 특별활동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으리라 봄) 이와 관련된 수요의 예측과 급격한 수요급증에 대비하는 문화예술활동인구의 양성체계도 정비할 필요에서 이와 관련된 기본자료의 구축은 필요하다.

6. 여성문화인력 양성과 지원

가.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문화 분야 여성전문인력의 양성은 현재의 수요상황에 비추어 보아 시급하다. 문화 예술분야의 각 하위 영역을 선정하여 각 영역별로 적정수요인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하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 전문인력, 여성문화기획자, 우리말 지킴이 인력 번역가,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사업에 여성전문인력, 컨벤션산업 여성인력, 관광산업진흥인력, 스포츠외교 분야 여성전문가 등 무수한 분야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은 기존의 여성적 성향으로 강조되어 왔던 섬세함, 인화력, 상대방 입장 이해와 배려, 인내력,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총체적 고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의 점들을 장점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다양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작업들이 점점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권력이나 권위를 이용한 상부하달식 문제해결이 아니라, 상호간의 입장의 이해와 배려, 다수의 변인들의 조화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평등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문화구조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화예술적인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타의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제도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고 중요한 문화예술활동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이다.

이것은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각 분야별 신진 유망 인력 발굴 및 해외 기관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나, 여성 관점의 문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지원, 여성 문화 전문 인력의 전국 문화기관 등 인턴쉽 운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 양성평등목표제 도입, 여성의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지역·단체 간 연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과 단체 실무자 교육, 여성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강화 등의 사업으로 구체화 된다.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과 관련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성인지적 분석>을 주요 연구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정책 사업의 효과와 결과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고찰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상

황과 그 효과를 추적조사와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분석해 내고, 기금지원의 효용성 측정과 실제로 남아 동일한 정책효과를 산출해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결과 예산분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기존 지원사업의 성별효과와 정책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 지원사업의 성별 효과와 정책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향후 기금지원의 방향성과 여성문화정책의 현실적인 대처방안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예산보다 기금을 이용한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지원이 정책효과 측면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예술활동지원은 예술 창작인에 대한 지원과 예술창작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 예술 창작 여건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창작인의 성별,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기본분석이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책지원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의 <표2-8> 근거해서 볼 때 문화예술인들의 취업상태에서 여성 예술인은 남성 예술인보다 임시고용직 종사자가 두 배 많으며,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²⁷⁾ 월평균 예술 관련수입에서 고액으로 올라갈수록(200만원 이상) 남성이 두 배 정도로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예술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수입이나 안정된 직장의 여부는 여성이 여성보다 보다 우월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창작활동지원에 관련된 사업에서 정책사업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리서치 작업과 성별영향평가가 우선되어야만, 예술활동 지원의 효과가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임은 분명해진다.

2005년 문화관광부 수탁과제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에서는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실태를 전문 종사자와 잠재적 종사자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활동을 기획/제작, 창작, 교육, 스텝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여성들은 이 중에서 창작/작품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27) <표4-5>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교육관련직종

(단위 %)

응답내용		사례수	대학교수	대학강사	정교사	준교사	학원강사	기타	무직/비교육직	계
2003	남	1354	11.0	5.2	5.0	0.5	1.8	0.2	76.3	100.0
	여	593	6.4	9.8	3.0	4.0	9.3	1.3	66.1	100.0
2006	남	1306	9.3	6.7	4.8	0.8	2.3	0.0	76.0	100.0
	여	694	4.8	8.6	3.3	1.9	8.8	0.1	72.5	100.0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2006

들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잠재적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획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서 기획/제작과 관련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예술가들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고, 특히 스텝 활동의 경우 부정적 대답이 평균을 상회하였다.

전문종사자들의 경우에, 생산능력 활용과 고용창출을 위한 대응방안에서는 전문인력양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교육활동 지원 강화였다. 경제적 소득에서는 전문 종사자의 경우 평균 138만원으로 나타났고, 100~200만원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잠재적 종사자들의 경우에, 문화예술 전반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 문화예술분야 수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활동여건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지역이었고, 지원체계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지역이었다. 불만사항으로는 장기적/체계적 문화예술정책의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들을 종합해보면, 여성문화예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미흡한 지원체계 및 장기적 문화예술정책의 부재, 공교육체계를 통해서 공급되는 문화예술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소수에게 편중된 문화예술 활동, 활동영역별·장르별로 구분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결여, 남성 중심적 기관운영, 지역적 차별성, 가족과 사회 내의 성역할 구분과 성차별 문제 등이 있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로, 문화예술계 여성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기획·경영·행정직 여성인력 양성,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여성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국고와 기금의 효율적 활용, 성인지 문화예산의 확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반여성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

일반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여건 불충분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던 여성들을 공공의 예술문화 활동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서 예술문화활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개인의 재능과 관심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문화예술을 전공한 여성이 예술적 재능과 예술적 창조요구를 현실적으로 표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되리라 본다. 소규모 지역차원의 아마추어 또는 준 아마추어 문화예술교육인력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술교육에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예술향수계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등으로 정책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 지원 시 여성예술가들에 대한 ‘기금할당제’ 도입, 국공립 공연장이나 미술관에서의 여성예술가의 발표기회 확대보장, 국공립도서관에서의 여성 도서구입비 책정이나 여성저작물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여성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전시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들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7. 여성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여성문화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초·중·고 교사에 대한 양성평등문화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과 연계하여 “여성문화의 날”, “여성문화인”, “여성역사인물”등을 선정하고 이를 공교육과정의 교과서에 포함시키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의식이 초·중·고시절에 거의 완성된다고 보고, 초·중·고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양성평등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단체나 교육단체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 교육자들과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지역별 국가별 단위의 평가와 비교를 통해서 이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영유아들과 어린이들에게 기존의 모순적인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여과없이 전수되지 않게 하는 양성평등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한번 고착된 성차별의식은 수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규교과 과정에 양성평등 문화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예술적 소재를 이용한 문화콘텐츠는 그 양과 수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넘쳐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위보다 시장논리나 경제논리에 따른 피동적인 문화콘텐츠 소비활동을 하기가 쉽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그것의 변화 속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지적 평가와 판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지 않는다면, 국가

적인 차원의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일반적인 문화콘텐츠의 발전방향이 서로 상이해질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양성 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대안적 문화콘텐츠 개발 및 DB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융자사업, 도서 등 문화상품 선정·구입 지원 시 양성평등 기준을 도입해야 하고,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진흥을 진작하고 법률적인 강제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적 우수영상물 지원, 우수게임, 우수비디오, 우수애니메이션 등 각종 시상에 양성평등문화상 부문 신설등의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리라 본다.

제5장

현행 양성평등문화 관련 법령 현황 및 한계

1. 문화관련 법령체계 및 내용
2.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령의
한계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헌법)과 양성평등 문화 관련 국제기준, 현행 문화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 정비의 필요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출해보고자 한다.

1. 문화관련 법령 체계 및 내용

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²⁸⁾

1) 문화국가원리의 재정립과 문화적 기본권의 의의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제69조)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문화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 동시에 그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적 기반으로 언론·출판·학문·예술·교육·양심·사상 등 제반 기본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칙규범이자 목적규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²⁹⁾ 비록 문화국가조항이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문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는 점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목적규정이자 국가의 무라고까지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문화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이 국가가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해 문화가 공급되어야 하는 국가, 즉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자칫 배타적인 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국가라는 의미는 우리 헌법의 다른 원리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사회

28) 문화연대, 민족문화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권 개념 정립과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의 필요성”, 2005. 3. 참조.

29) 강철근, “문화국가와 국산영화의무상영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pp. 237-26;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pp.179-197; 홍성방, “문화국가의 원리”, 『고시연구』, 1998.5, pp.83-99.

30) 헌재결 2000. 6. 29. 98헌바67.

국가원리를 전제로 인간의 존엄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국가란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문화형성의 과제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문화적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문화영역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고 문화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문화가 경제에 예속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문화적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전통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³¹⁾ 문화의 기반조성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을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포괄하는 문화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혼인과 가족의 보호권이 명실 공히 이룩될 때 문화적 환경권으로서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³²⁾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대단히 배타적이고 좁은 의미의 문화관련조항이 총강부분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국제화·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국가원리가 20세기와는 달리 문화적 기본권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문화 기본권의 개념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 보면 현행 헌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단순히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만을 목표로 해서는 문화국가가 달성될 수 없으며, 제9조는 헌법제정권자들이 문화적 기본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문화(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과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다.³³⁾

문화의 개념을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가꾸고 돌보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문화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사회국가의 원리를 충족시키고 보충해주며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개념 정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문화는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31) 홍성방, “문화국가의 원리”, 『고시연구』, 1998.5, p83.

32) 계획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p423.

33) 헌재결 2004. 4. 27. 98헌가16.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의 창조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인재양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 문화가 생활문화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발전과 국제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근대입헌주의 시대의 부국강병이 제국주의적·절대왕정적·권위주의적·중앙집권적 결과물이었다면 21세기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국가의 위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의 목적규정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문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³⁴⁾

3) 문화 기본권의 내용

문화적 권리는 소극적으로는 사회의 한 영역인 문화와 관련된 권리라는 영역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권리는 영역을 초월하여 자유권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권이자 환경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다.³⁵⁾

가) 자유권적 문화기본권³⁶⁾

문화의 자율성 확보에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영역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문화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전체주의적 문화통제에 대한 반성에 의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정되게 되고 또한 복지국가노선 전개에 의해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생성이 촉진되게 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의 최고법규인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개념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문화를 널리 인간의 정신활동의 총체로 파악한다면, 문화는 정신적 자유로서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문화 혹은 예술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론적으로는 인간의 정신활동의 총체로서의 문화에 관련된 중요한 규정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행복추구권’,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

34)박선영, “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헌법학연구』제12권 제4호, 2006.11, p.268

35)고토 가즈코, 임상오 옮김, 『문화정책학』, 시유시, 2004. pp.121-127.

36)박찬호, 『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pp.19 이하.

의 자유'로 규정된 일련의 정신적 기본권이다. 이것들은 비록 국민의 권리 행사 결과가 '인간문화로서의 통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문화적 자유"이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권,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향유할까 또는 창조할까 하는 문제는 종교, 사상, 학문과 함께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가장 깊게 관계되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다.

나) 사회권적 문화기본권

문화진흥 및 문화산업진흥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념이 되며 문화행정을 공공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사회권적 법리로서의 문화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 특히 헌법 속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문화는 국민 각 개인의 자발적인 영역이므로 국가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도, 막대한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호·계승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성 혹은 민간의 투자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문화 보호라는 것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무는 '국가의 책무'에 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문화가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서 만인이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법제상으로 확립되어 준다면,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공공기관에 위임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에 있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실제로 다양한 '문화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정'의 추진에 의해 문화진흥의 혜택을 받는 또는 문화의 향유를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오히려 애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1.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적 생활에 참가하고, 예술 감상 및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창작된 과학적, 문학적 또는 미술적 작품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가맹국에 대한 이념적 합의형성을 취지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강제적 효력의 문제로 인해서 196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은 당시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인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권적 법리로서의 '문화적 기본권'개념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색되어온 권리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인권과 국제인권규약의 이념에 기초하여, 1970년 이후 각국의 문화정책상황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그때에 문화정책을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정책(Cultural Policy)이란 ‘문화적 필요(Cultural needs)를 충족시키는 의식적·의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총칭’이고, 그것은 ‘일정한 사회에서 특정한 시대의 그 사회에 유효한 물리적 및 인적인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고, ‘문화적 발전에 관한 기준은 개성의 완성 및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의해 명확해져야 하고, 문화는 이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즉 ‘문화적 필요는 충족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중심 과제가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문화 영역에서의 조건정비이며, 이러한 정의의 배경에는 문화는 향유하는 국민의 권리가 내제되어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문화적 필요’의 내용을 회의, 보고, 선언, 권고에 따라 서서히 명확히 하여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있다.

다) 환경권적 문화기본권³⁷⁾

환경권 개념의 문화적 권리는 모든 사람이 좋은 문화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확장된 개념의 문화적 권리이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소득의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통 빈곤은 경제적 빈곤으로만 이해되지만 빈곤한 문화환경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여유를 앗아가 내면적 생활을 파괴한다. 훼손된 생태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존속이 위협하는 것처럼, 훼손된 문화환경은 인간의 인간학적 존속을 위협한다.

나. 문화관련 국제기준

1) 유엔

우리에게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문화적 권리는 UN이 1948년 12월 10일 제정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이미 사용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개념이다.

UN의 ‘세계인권선언’은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 인권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인권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37) 노명우, “문화현장’제정과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과학』 46호, p.223.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면서 문화적 권리가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문화적 권리 개념은 이후 1966년 12월 16일 UN이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tents)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5조에서 인간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적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후 문화적 권리 개념은 1976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1989년에 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조약’에서도 제13조의 ‘표현·정보의 자유’이외에 제31조에 ‘휴식, 여가, 놀이, 문화적·예술적 생활에의 참가’가 규정되어 있다.

2) 유네스코

문화기본권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1966년의 제14회 총회(파리)에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이 이루어졌고, 이 선언을 계기로 문화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68년에는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획득해 온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에 이어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가 인류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970년에는 ‘문화정책에서의 제도, 행정 및 행정의 제 측면’에 관한 정부간 회의가 베니스에서 열렸고, 68년의 성명을 근거에 두고 새로이 현실적으로 ‘문화정책’에 착수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6년 유네스코 제19차 총회(나이로비)에서 ‘대중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가 및 기여를 촉진하는 권고’가 채택되었다. 이 권고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명확해진 ‘문화적 권리’가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법제도로써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1980년에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나와, 사회적으로 냉대받으면서도 각국의 문화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한층 문

화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권고했다. 1972년부터 81년에 걸쳐 문화정책에 관한 지역회의가 이루어지고, 1982년에는 문화정책에 관한 세계회의가 멕시코에서 개최되어 ‘규약과 내용 양면에서 70년대 이후의 전개를 집약한 장’이 되었다.

1982년의 제2회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는 70년대를 통틀어 문화정책의 대상이 된 문화개념의 파악방법이 확대되고, 보다 심도 있는 관심을 보이게 된 동향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의 중점에 대해 다음의 7가지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의 존중, 두 번째 문화정책에서의 민주주의와 참가의 중요성 인식, 세 번째, 문화적 발전을 사회발전의 목적 그 자체로 파악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제기, 네 번째 문화와 교육의 상호관계 강조, 다섯 번째 문화와 과학기술, 여섯 번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일곱 번째 문화와 평화의 관계가 논해지고 있다. 이들 7가지 특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화개념이 ‘사회생활총체에서의 다면적인 접점에서 다시 파악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근본이념이 되는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문화개념을 내포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5년에는 문화다양성협약(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을 선언하였다. 이는 문화향유권과 문화표현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문화권이 생존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를 창조할 권리, 문화활동에 참가할 권리 등)의 세계적 동향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는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문화의 진흥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나온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때를 같이하여, 독립된 예술가의 사회보장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1983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된 ‘예술가 사회보장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1988년에 ‘예술가의 작업상의 지위에 관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Act on the professional status of the artist)안이 회의에 제출되고 가결되었다. 이들 예술가의 지위를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보장하려고 하는 법률은 예술가의 자율성(예술창조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불가결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 유네스코의 권고 등에 따라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다양한 구체적 시책이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수자의 문화향유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남성적 감수성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성의 감수성 표현

및 양성평등 문화표현에 대한 요구와 여성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한 키워드로 양성평등한 문화표현과 문화향유권 확대가 부각되고 있다.

다. 현행 문화관련 법률 현황³⁸⁾

1) 문화관련 법령 체계³⁹⁾

문화에 관계되는 법제는 크게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법제, 문화산업 및 문화미디어 관련 법제, 관광산업 관련 법제, 체육 관련 법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주요한 목적은 첫째,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창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는데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며, 셋째,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기능 보장 및 언론과 국민간의 건강한 상호관계 형성을 만드는 데 있다. 결국 이러한 법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문화 창조력의 증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가) 목적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1972년에 제정되었다(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 진

38) 2006 문화정책백서 참조.

39) 박찬호, 앞의 책, pp.83 이하 참조.

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3조).

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1)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5조). 또한 대형 건축물(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3) 전문예술법인의 지정·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국가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예술의 전당, 기타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2).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4) 문화지구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제8조). 2002년에는 문화지구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지구 안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5)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2000년에는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설치기준을 '1/100이상에서 1/100이하로 완화'하였다.

다)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1) 문화의 날 지정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하고, 문화의 달은 매년 10월로 지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시행령 제26조).

(2) 장려금의 지급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3) 문화강좌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으며,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현장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5년 개정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 기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바) 최근 개정 내용

최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설치기준을 '1/100이상에서 1/100이하로 완화'하였고,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예술의 전당을 동 법상의 특수법인으로 흡수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시설 등의 밀집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문화지구 지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지구 안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2003년에는 문화산업의 정의 규정에 기획분야를 포함시켜 수준 높은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는 질 높은 문화예술 창작물 및 문화예술용품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현장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서·문화전용상품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5년 개정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 기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가) 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나) 주요 내용

주요내용은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무 및 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 등의 설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망 구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다.

셋째, 초·중등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

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국·공립문화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교수업무 등에 종사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4) 대한민국예술원법

가) 목적

「대한민국예술원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함)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8년 제정되었다(제1조). 동 법은 총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예술원의 기능 및 조직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에 필요한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예술원상 수여,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제2조).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으로 구성하며, 1996년 예술원 회원의 수를 75인에서 100인으로 증원하였고, 예술원에 전문분야별(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연극·영화·무용분과)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제3조).

다) 회원의 자격과 선출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제4조)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제5조). 2005년 학벌주의 조장의 우려가 있는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하였다.⁴⁰⁾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

40) 개정 전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경력이 20년

되, 연임할 수 있다(제6조).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제7조).

라) 예술 창작 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12조),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제13조).

5) 공연법

가) 목적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8장 4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미술·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도 회원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 공연장의 설치·운영

(1) 공공 공연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공공공연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고를 보조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용자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라)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13조),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정된 무대예술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부여한다. 무대예술전문인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 내지 3급으로 구분한다.

마) 최근의 개정내용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에는 「공연법」을 전문 개정하여 공연자 등록제를 폐지하였고,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공연예술계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영화를 제외한 일반공연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각본 사전심의제와 공연의 정지·중지명령권을 폐지하였다. 이 밖에 민간공연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를 도입하여 공연예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였다.

2001년 12월 31일로 「공연법」을 개정하여 공연장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연소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만18세 미만의 자로 하던 것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하였으며, 공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공연예술기본 계획에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종전에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외국인 공연추천의 취소사유를 연소자 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킨 때 및 공연추천 조건에 위반한 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및 무대예술전문인의 의무배치시기를 당초 2002년 1월에서 2005년 1월로 연기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26일 「공연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켜 「영화진흥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공연장에서 영화상영관을 분리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남았던 공연신고 제도도 폐지하였다.

6)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가) 목적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에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7장 5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영화,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포함한다(제2조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3조).

나)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산업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총괄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조). 또한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및 문화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문화산업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제30조의3).

다) 창업·제작·유통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6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10조),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

라) 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전문인력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16조).

(2)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제24조).

(4)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지원

2006년 개정으로 지방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제28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28조의3).

(5)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제29조).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30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제31조). 이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등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둔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의 창

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공공문화콘텐츠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사용료 징수 및 관련 사업자 지원,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작권·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의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사용료 징수 및 관련 사업자 지원,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제32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위원회 위원 1인, 출판·음반·비디오물·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33조).

위원회는 문화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문화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심의한다(제34조).

바)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졌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고, 기

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하였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2006년 개정에서 도입하였다.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유통 및 처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그 밖에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행한다.

아) 최근 개정내용

2002년에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2006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구’의 지정·지원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내에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도록 개정하였다.

7) 영상진흥기본법

1994년(공포는 1995년 1월)에 제정된 「영상진흥기본법」은 당시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 대상이 주로 영화분야에 국한되어 있을 시기에 영화를 영상과 영상산업이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로 추진되었다.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상물창작 및 제작 진흥, 영상물제작기술의 발전, 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영상관련진흥재원의 운용, 영상제작기반의 확충, 국제교류 및 협력, 영상자료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영상진흥기본법은 현재 문화관광부 소관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달리 모든 부처의 영상관련 정책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도록 추진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이를 절충하는 수준에서 제정된 결과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도 각 부처간 협의조정 제도가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하며, 재원부분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기존에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기금을 각 부처에서 별도로 영상산업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부처할거주의 및 아무런 의미 없는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선언적인 규정에 그친 결과 영상진흥기본법은 1994년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으며, 시행령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또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한 개정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별도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상산업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주된 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정되고 있을 정도이다.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가) 목적

동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에 제정되었다.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2007년 개정으로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나)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영화 인력의 양성,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영화발전기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운용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한국 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가) 목적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장르별 분법화 추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 차세대 핵심 문화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인 게임산업의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단속,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게임산업의 진흥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 정부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게임문화의 진흥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게임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의 예방 등을 위해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가) 목적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장르별 분법화 추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과 규제 위주의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음악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의 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8일 공포하였다. 동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창작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출촉진과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창업지원 등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위법하게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음악산업의 진흥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

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전문인력의 연수·해외 교류 기회 확대,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련법의 한계 및 문제점

지금까지 문화관련 법령 중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많은 법 중 소극적인 양성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법은 2005년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으로 그 당시 화두로 떠오른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전히 한계로 남는 것은 현존하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문화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은 한 번도 정책의 고려사항이 된 적이 없었다. 성 주류화가 최근에 부각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문화정책이 성별 이슈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문화는 성 중립적이라는 오래된 시각과 시장 원칙을 문화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 사이에 문화가 양성불평등을 반영하고 나아가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화영역을 성인지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남성적 시각과 정체성이 문화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정책에 있어 성 분석적 이슈인 시장의 인력 구조, 문화정체성, 문화교육, 문화복지가 한국의 문화영역에서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다. 먼저 인력의 문제에서 문화 전반에 걸쳐 남성인력이 지배적이다. 이는 단순히 남성의 숫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뿐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직종과 직급에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문화정체성에서는 우리 문화전통을 이루는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남성 혹은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리큘럼과 인력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뿐 아니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법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성을 가장한 성 중립적 규정이 양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시책이나 계획을 강구하고, 정책이나 사업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과 하부조직을 통한 구체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정책과정과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현재도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성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성 중립적인 문화예술 관련법령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현행 문화정책 관련 법령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그 밖에 특정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나, 이상의 법률들은 그 대상 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여성과 문화가 접목되어 있는 법으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동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28조에서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킬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의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만으로는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다.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헌법 상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무 부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지원시책,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문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성계획,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비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문화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개정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2007. 5. 22. 개정)에서 문화정책국 내의 문화정책팀장의 분장 사무에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제6조제3항 13의 2호)이 추가되었다. 생색내기 용이 아닌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양성평등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도 문화 관련법의 개정이나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의 제정 시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주는 과정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문화정책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을 위한 문화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한 정비를 함으로써 양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문화정책의 성별 영향분석을 위한 기술적 지원, 성인지적 문화 통계 및 지표개발 지원,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지원, 문화예술분야 여성 전문인력 육성 지원, 문화관광부 주관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 통합방안에 노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방안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2. 법률 제·개정 목적 및 입법 방식
3.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 방안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 문화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 증대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공공문화정책도 그 범위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성 중립적 (gender-neutral)’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문화정책의 특성 상 성별을 고려한, 즉 성 인지적인 (gender-sensitive)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정책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전통, 심미적 가치 등과 연관성이 있으며, 여성학자나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양식, 문화적 전통, 심미적 가치의 추구,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 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문화 영역에서의 성별 차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성차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문화생활에서의 불균형, 즉 특정성이 특정 문화 활동에서 배제(exclusion)되거나 분리(segregation)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성차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문화생활에서의 성별 차이가 오히려 문화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고 문화적 가치나 문화상품, 콘텐츠 양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문화정책은 문화생산 및 향유에 성별 차이, 그리고 문화정책이 성별에 따라 어떤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객관적·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성차의 긍정적 효과(문화다양성 확대 및 문화자원의 잠재력 확대)는 최대화하는 반면, 성차의 부정적 효과(특정 영역에서의 성별 불균형이나 성별 분리)는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생활에서의 성별 불균형 해소 및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고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 문화정책의 중점 방향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문화적 가치 및 콘텐츠가 지나치게 상업화·획일화되어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완화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에 여성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여성창작자 지원정책은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나 콘텐츠를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과 그 방향 모색이 가능하다. 단순히 여성의 권익향상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든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개발이 가능하다.

나. 문화권 확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증대

양성평등 문화정책은 문화향유를 질적·양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문화 향유에서는 성별 불균형보다는 문화향유자로서의 여성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잠재적 욕구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획일화된 상업적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기초 예술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수요층으로써 여성들이 가진 잠재력은 향후 기초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지역사회 생활주체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참가자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 내린 문화정책의 확산, 문화향유의 생활화를 지향한다면,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 집단이다.

다. 기초예술·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증대

기초 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의 인력 상황을 보면 일부에서 성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문화예술 잠재인력은 많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출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문화예술인 및 문화산업 종사자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불안정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인력활용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여성이 갖고 있는 차이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가 상품화되고 문화 산업에 확대되는 최근의 사회 환경에서 공공 문화정책의 중점 방향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즉 문화적 가치 및 콘텐츠가 지나치게 상업화·획일화되어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완화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여성인력의 진출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여성적 가치나 여성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또는 하위문화 subculture)를 표현하는 새로운 콘텐츠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문화전문인력 지원 정책은 (당장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나 콘텐츠를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수단의 확보 필요

현재, 양성평등문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정책에서 양성평등 관점(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은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한 「창의한국」(2004)과 여성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창의한국에서는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로써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반조성, 양성평등문화 환경조성,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향유 확대, 여성문화 창조 지원, 여성문화유산 발굴 계승과 아시아 문화교류 거점 조성 등이 강조되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도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참여와 관련된 정책과제로써 문화예술실태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여성 참여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양성 지원,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 파악 및 양성계획, 장기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비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문화예술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일회성 지원행사가 대부분이며 지속성을 결여하고 있다. 성인지 문화정책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양성평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3억에 불과하고,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모두 30억 정도이나, 대부분은 개별적인 활동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양성평등문화 환경조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전담 부서나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객관적 정책 자료의 구축 및 축적,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구할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새로운 정책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를 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마. 강력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통한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발전기반 조성

법 제정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강력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행 문화관련 법제는 크게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법제, 문화산업 및 문화미디어 관련 법제, 관광산업 관련 법제, 체육 관련 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주요 목적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종 문화예술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문화예술창작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진흥시키고,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기능 보장 및 언론과 국민간의 건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법률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고 문화창조력의 증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관련 법령으로는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그 밖에 특정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 「방송문화진흥법」 등이 있다.

이상의 법률들은 그 대상 범위가 문화산업, 문화예술, 그리고 특정 문화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시책 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시책을 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중 문화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동법 제3장의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이 있지만(제28조) 동법 제28조의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만으로는 그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보인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서 오히려 이에 입각하여 실무 부처에 맞는 좀 더 실현 가능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고, 단지 원칙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위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지원시책, 추진체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즉 문화 분야의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 문화정책 기본계획, 여성문화인력 실태파악 및 양성계획, 문화정책의 성인지적 비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문화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양성평등문화진흥·육성을 위한 독립된 추진체계와 시책,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과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법률 제·개정의 목적 및 입법 방식

가. 법률의 목적 및 방향

법률 제·개정의 목적으로는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통한 문화 생산, 참여와 향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 마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 법률의 대상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개정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문화유산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문화유산 분야에 공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기본법 및 진흥법, 각 개별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토대상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여기에서는 기본법과 진흥법을 대상으로 법 제·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 입법 방식

입법방식은 크게 독립입법을 제정하는 방식과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은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실제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서 제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률제정의 용이성과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관련 법률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이념과 시책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입법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각각의 문화영역에서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이라는 단일법 제정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차별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영역에서의 여성의 특성 및 장점을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포함한 문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과 문화기본법 제정 시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문화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기본이념과 목적에 양성평등 이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문화예술기본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관련 각종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 규정과 함께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장을 설치하여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원시책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성평등문화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문화산업, 문화예술과 각 분야의 문화관련 법 역시 성인지적 시각에 입각하여 대폭적인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문화 관련법이나 「문화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법률 상호간의 충돌방지는 물론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1) 기존 법률 개정 방안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현행 문화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하에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관련법 중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그리고 지역문화원진흥법에 국한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고, 문화기본법이 제정될 경우에 대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문화예술진흥기본법 개정안

(1)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양성평등 이념 반영

목적규정에 양성평등 이념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각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성 평등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양성평등이념의 구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의 목적에 양성평등의 이념을 포함시키는 방안 보다는 기본이념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 속의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이라는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입법의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문화예술 진흥에서의 양성평등의 구현이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된 장을 만들어 다음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15조의1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하여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조(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조성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작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4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예술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5조(여성문화유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의6조(성별문화영향평가)① 국가는 문화예술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7조(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의 지정)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지원
2. 양성평등문화 통계 및 지표 개발
3. 문화예술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4. 문화예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 지원
5. 문화예술 주관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 관점 통합
6. 그 밖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문화예술진흥기금 조항 개정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성인지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나의 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성인지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4. 남북 문화예술 교류
5. 국제 문화예술 교류
6.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또는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8.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9.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 속의 내용은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을 제정할 경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개정안임.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항 개정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때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에 문화예술진흥에서의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을 추가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8.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 () 속의 내용은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을 제정할 경우를 대비한 개정안임.

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창의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의 측면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있는 측면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창의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는 그 동안 부족하였던 성인지적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다.

(1)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양성평등 이념 반영

목적규정에 양성평등 이념을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각각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성 평등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양성평등이념포함)

제1조의2(양성평등이념의 구현)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은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의 목적에 양성평등의 이념을 포함시키는 방안보다는 기본이념으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 속의 양성평등 이념의 구현이라는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입법의 편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6조 관련)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이나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법 제30조의3)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33조의4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나열되어 있다. 이곳에 문화산업 성별통계를 추가하는 것도 양성평등한 문화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 33조의4 (실태조사의 대상) ①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31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진흥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 ⑤ 진흥원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는 특정 성이나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 ⑤와 ⑥은, ⑥과 ⑦로 옮긴다.

(5)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 조항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성인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나의 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양성평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
 - (10.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11.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속의 내용은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을 제정할 경우의 재원 마련을 위한 개정안임.

다)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

균형 있는 지방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성 평 등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나 추가하였다.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10.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라) (가칭)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정책 영역과 패러다임 변화 등 사회문화의 변화와 현실을 반영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목표·수단을 확보하며,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부족한 문화관련 법률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수행한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⁴¹⁾에서 제시한 「문화기본법」초안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기본연구 2004-28, 2004년 참조.

(1) 문화정책의 양성평등이념 삽입

우선 『문화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기본이념과 목적에 양성평등 이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문화기본법 제4조 제1항의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에 “모든 국민이 신념, 종교, 성별, 학력, 지역, 연령, 소득, 신체, 직업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균등한 문화활동의 창조·참여·향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성평등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제2조 문화정책의 기본이념에는 “지역·계층·세대간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참여와 결정을 통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라고 되어 있어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문화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이념이 부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선언적 의미를 가질지라도 그 동안 남성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문화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의 기본이념에 “성별”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제2조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문화정책은 창의적 문화국가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창조적 사고와 표현 및 삶의 질을 제고 하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문화를 창달하고, 성·지역·계층·세대간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참여와 결정을 통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를 통한 정체성을 제고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문화를 통한 혁신과 지역의 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문화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기반을 마련하며, 국가경제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화발전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추가

문화발전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5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양성평등문화진흥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야 한다.

제35조(문화발전계획의 수립)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기반의 조성, 문화적 권리의 신장, 인력의 양성 및 문화전문인력의 권리신장과 보호, 문화진흥기관의 육성, 재원조성, 문화진흥을 위한 유통과 매개의 진흥과 수출촉진,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지역의 균형발전, 양성평등 문화 진흥, 문화정보화, 국제문화교류 및 남북문화교류협력, 문화관련 연구개발의 진흥, 문화교육 및 여가문화의 진흥, 기타 문화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성별문화영향평가

문화기본법안 제32조는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련 사업이나 계획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긍정적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을 고려한 문화다양성 확보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영향평가는 반드시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2조(성별문화영향평가)

- ① 국가는 문화 관련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사업이나 계획으로 인한 성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긍정적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여 위하여 성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성별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문화진흥위원회의 적극적 조치 규정 추가

문화기본법안 제37조는 문화에 관한 국가의 중요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문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가문화진흥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성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문화진흥위원회)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생략)
 2. (생략)
 3.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단 특정성이 7할을 넘어서는 안 된다.

(5) 양성평등문화진흥시책 및 기반조성에 관한 장 신설

양성평등문화진흥은 인프라 구축과 시책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화기본법에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 조성이라는 제목의 장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조문을 추가한다.

제4장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 조성

제35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하여 여성문화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문화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련 여성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조성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작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여성문화유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독립 입법 제정 방안

법명은 법률의 제정목적과 성격, 그리고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은 문화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추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법명은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여성문화진흥법, 성인지문화진흥법 등이다.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이라는 법명은 평등이란 차별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문화영역에서의 성별 차이는 불평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가 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향수측면에서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나, 창작(생산) 측면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성인지보다 양성평등 또는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성 인지문화진흥법이라는 법명은 ‘성 인지’(gender-sensitivity) 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가 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제기된 하나의 시각이며, 양성평등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인지 그 자체가 목적이나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인지적 시각 그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 인지는 번역어로 입법 이론상 맞지 않고, 일반 국민이 보고

그 법률이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여성문화진흥법이라는 법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한 특수성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각 법명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성평등문화진흥법이라는 법명이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표현한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진흥법, 촉진법은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당 분야를 장려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진흥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성인지적 문화정책의 추진 및 발전은 국가에 의한 특별 개입 없이 자연 발생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3. (가칭)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제정 방안

가. 법안의 구성

이 법안은 다음의 6개의 장과 부칙, 총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의 지정)
제3장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조성	제6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제7조(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 제10조(여성문화유산지원 등) 제11조(성별문화영향평가)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설치)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직무)
제5장 양성평등문화예술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제16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용도)
제6장	부칙

나. 법안의 주요골자

1) 법의 목적

이 법은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필요한 제도 및 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양성에 평등하게 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안의 주요골자

- 가) 문화관광부장관은 5년 마다 양성평등 문화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안 제6조).
- 나) 기본계획의 심의기구로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를 두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한다(안 제7조, 제8조).
- 다)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를 육성하고, 문화예술관련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안 제9조, 제10조).
- 라) 여성창작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 마)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
- 바)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안 제13조).
- 사) 문화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안 제14조).
- 아)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안 제15조~제17조).

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법안의 구성체계

가) 추진체계

(1) 정책수립

문화관광부장관은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문화진흥

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책

(1) 기본계획

문화관광부장관은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등이 포함된 양성평등문화진흥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시책

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조성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한다.

(3) 성별문화영향평가

국가는 문화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4) 지원

①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하여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작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문화시설 운영지원

각종 문화시설에서 양성평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및 여성문화예술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지원 할 수 있다.

④ 여성문화유산에 관한 지원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 재원

양성평등문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문화기금을 설치·운영한다.

다. 법안 전문 : 양성평등문화진흥법 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양성에 평등한 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양성평등 문화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의 지정)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지원
2. 성별 문화통계 및 지표 개발
3. 문화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4. 여성문화전문인력 육성 지원
5. 문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 관점 통합
6. 그 밖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장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조성

제6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하여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련 여성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조성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작자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문화유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11조(성별문화영향평가) ① 국가는 문화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성별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

제12조(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의 설치) 문화관광부 장관은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하여 양성평등 문화정책위원회를 둔다.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양성평등문화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 문화산업분야, 문화미디어분야, 관광분야, 체육분야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
 3. 문화관광부 기획조정팀장
 4. 문화관광부 각 실·국 주무팀장
 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장

제14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주요업무계획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이 7할을 넘을 수 없다.
- 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①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②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②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의 용도) 양성평등문화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2. 문화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3. 여성창작자 및 양성평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

4. 양성평등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
5. 여성문화예술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6. 여성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양성평등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5장 부칙



부 록

현행 법률 개정(안)

<부록> 현행 법률 개정안 (예시)

1. 문화예술진흥법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성평등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적 신설)	제1조의2(양성평등이념의 구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제4장 양성평등문화진흥 시책 및 기반조성
(신설)	제15조의1조(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문화진흥을 위하여 여성문화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2조(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관련 여성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 조성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3조(여성창작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창작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4조(여성문화시설의 조성 및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예술복합 공간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5조(여성문화유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문화유산의 조사, 발굴, 전시, 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의6조(성별문화영향평가)① 국가는 문화예술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하여 사업이나 계획이 성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별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5조의7조(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의 지정)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정책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지원 2. 양성평등문화 통계 및 지표 개발 3. 문화예술에 대한 성별 요구 조사 및 분석 4. 문화예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 지원 5. 문화예술 주관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성인지 관점 통합 6. 그 밖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성인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추가) 3.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4. 남북 문화예술 교류 5. 국제 문화예술 교류 6.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8.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9.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현 행	개 정 안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6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③ (생략) ④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8.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양성평등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적 신설)	제1조의2(양성평등이념의 구현)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은 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추가)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이나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③④ (생략) (5항 신설) ⑤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③④ (생략) ⑤진흥원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는 특정 성이나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호 추가) 9.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양성평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4 (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2항 신설)	제33조의4 (실태조사의 대상) ①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②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추가)

4. 지방문화진흥원법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추가) 10.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참고문헌

- 강익희. 2003. 『국내 지상파 방송사 인적자원 관리의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익희. 2005.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강철근. ‘문화국가와 국산영화의무상영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 고토 가즈코. 임상오 옮김. 『문화정책학』. 시유시. 2004.
- 김민정. 2007. ‘문화인프라와 지역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제1차 정책워크숍』자료집 (2007. 5. 16). 한국여성개발원
-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 김양희. 2004. ‘향후 여성정책 과제. 북경+10 이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제23차 여성정책포럼』
- 김예란·신현준·전규찬. 2005. 『미래사회의 문화인프라 예측 및 구축: 구조로부터 콘텐츠로. 콘텐츠를 넘어 실천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
- 노명우. “문화헌장”제정과 문화정책의 과제’. 『문화과학』 46호.
- 류정아. 2004.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 2007.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양성평등 문화정책 종합계획 토론회』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5. 2006.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2006.
- 문화관광부. 2002. 『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 연구』.
- 문화관광부. 2005.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실태조사·분석』.
- 문화관광부·한국노동연구원. 2005. 『문화예술 인력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
-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2005. 『한국여성의 문화향수 실태와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 문화관광부·한국여성개발원. 2006. 『문화산업분야 여성인력 실태 및 양성방안』.

- 문화연대. 민족문화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5. 『문화권 개념 정립과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의 필요성』.
- 박선영. '헌법 제21조에 대한 개헌논의'.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6.
-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박찬호. 2006. 『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백선희·임유경. 2003. 『영화인 육아지원을 위한 사회적 방안의 모색 - 영화인 어린이집 설립운영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 연구보고서.
- 양민석. 2004. '한국 애니메이션 문화산업의 성별 정치학'. <사회과학연구> 제2집 2호.
- 윤석민·이철주. 2003.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조직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2호.
- 이수연. 2005. 『문화관광정책의 성 분석 및 성 주류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이수인. 2006. '게임 산업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젠더리뷰』. 2006년 가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종구·김영 외. 2006. 『방송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사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 정광열 외. 2004.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윤경.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를 위한 소고 - 방송문화산업계 현황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문화진흥을 위한 제1차 정책 워크숍』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5. 16).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문화콘텐츠산업 인력구조 및 직무분석 - 애니메이션산업을 중심으로』.
- 홍성방. '문화국가의 원리'. 『고시연구』 1998.5.
- 황정미·장윤선 2006. '문화산업의 남성중심성과 여성의 직업경험'. 『젠더리뷰』. 2006년 가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2007년 8월 인쇄

2007년 8월 발행

발행인 : 김 종 민

발행처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114 (代)

인쇄처 : 도서출판 늘 품

전화 / 2275-5326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70000-000214-01